

주간 통일정세

2016-05

Contents

I. 북한동향

1. 핵문제 및 안보
2. 대내 정치
3. 경제
4. 사회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III. 북한인권동향

1. 북한 내부실상 및 대내외 동향
2. 북한인권
3. 탈북자
4. 이산가족
5. 대북지원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동향

1. 핵문제 및 외교안보

가. 공식발언과 제안

- 특이사항 없음.

나. 주요 매체 논평

- 北 ‘외국법자문사법’ 수정 요구 리퍼트 美대사 비난(1/25, 우리민족끼리)
 - 우리 민족끼리는 25일 게재한 글에서 “리퍼트가 남조선 국회의 외국법자문사법 논의에 차단봉을 내리도록 한 것은 남조선 법조계를 통째로 집어삼키려는 미국의 속심(속내)을 실현하는데 외국법자문사법이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라고 주장함.
 - 이어 “남조선 법조계는 물론 각계층 인민들이 리퍼트의 오만무례한 행위에 대해 ‘주권침해’, ‘월권행위’라고 비난하고 있다”며 “자국의 이익을 충실히 보호한 리퍼트는 득의양양하여 흰목(터무니없이 힘을 뽐냄)을 뽑고 있다”고 비난함.
- 北, ‘독도는 일본땅’ 日외무상에 “후안무치의 극치”(1/26, 우리민족끼리)
 - ‘우리민족끼리’는 26일 ‘독도 강탈책동을 단호히 짓부셔 버려야 한다’란 글에서 “일본 외상 기시다가 국회에 얼굴을 들이밀고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 라느니, ‘끈질기게 대응할 것’ 이라느니 뭐니 하는 나발까지 붙어댔다”면서 “실로 후안무치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고 강력 성토했.
 - 또한 “독도가 우리 민족의 신성한 영토라는 것은 역사적 사실 자료들과 지리적 및 법률적 근거에 기초해 이미 명백하고도 충분히 입증되었다”며 그런데도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아무런 타당성도 없는 황당무계한 꾀변”이라고 비난함.
- 북한 “미국, 남조선에 대한 사드 배치 노골화” 비난(1/31,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31일 “미국은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대한 미군무력증강에 커다란 우려를 품고있는 러시아와 중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남조선에 대한 ‘사드’ 배비(배치) 기도를 노골화하였다”고 밝힘.

- 신문은 이어 “미국의 미사일방위체계 구축 책동은 대국들에 대한 전략적 우세를 차지하며 이 나라들을 압박해보려는 어리석은 기도로서, 세계평화와 안전을 더욱 위태롭게 할 뿐”이라면서 “미국의 야심적인 미사일방위체계 수립 책동을 강건너 불보듯 방치할 나라가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고 주장함.
 - 이어 신문은 “반미 자주의 길을 곳곳이 걸어가는 나라들에 미국은 이처럼 적대시정책을 집요하게 실시하고있다”면서 “이러한 사실은 미국에 대해서는 그 어떤 환상도 가져서는 안되며 미국이 침탈된 공약을 늘어놓을수록 보다 각성을 높여야 한다는것을 시사해주었다”고 덧붙임.
- 북한 “국제유가 하락은 미국의 책동 때문” 주장(1/27,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7일 “최근 시기에 원유가격의 파동이 심하게 나타난 데는 세계경제장성(성장) 속도가 굼떠져 국제시장에서 원유에 대한 수요가 낮아진데도 원인이 있다”면서 “하지만 일부 분석가들은 그 주되는 원인을 국제원유시장을 장악하려는 미국의 책동에서 찾고 있다”고 보도함.
 - 신문은 “원래 미국은 전통적으로 다른 나라에서 원유를 수입하며 생존하여왔다”면서 “그러나 지금은 세계적인 원유생산국으로 되고있다. 혈암유(암반 속 원유)를 대대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설명함.
 - 이어 “미 공화당은 수년전부터 원유수출금지조치를 해제하기 위해 모지름(안간힘)을 써오던 끝에 지난해 12월 미 국회 상하량원에서 드디어 원유수출금지조치해제안을 통과시켰다”면서 “법적 장애물을 제거한 미국의 혈암유생산업자들은 원유생산량을 최대한 늘이는 방법으로 국제원유가격을 떨구어 저들이 손해를 보더라도 국제원유시장에서 패권을 쥐려고 하고있다”고 주장함.

다. 회담 관련

- 북한 핵라인 ‘대외행보’ 착수…최선희 외무성 부국장 ‘방중’(1/29, 연합뉴스)
- 북한의 6자회담 차석대표인 최선희 북한 외무성 미국 담당 부국장이 중국 베이징(北京)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연합뉴스는 29일 보도함.
 - 북수의 베이징 소식통들은 29일 “최 부국장이 28일 오전 베이징(北京) 서우두 국제공항을 통해 중국에 입국하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전했다고 뉴스는 보도함.

- 이에 한 대북 관측통은 “북한 관료들이 베이징을 거쳐 제3국으로 출국하는 경우는 종종 있는 일”이라며 “최 부국장이 미국 담당인 만큼 북중 당국 간의 접촉 때문에 베이징에 온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으며, 다른 관측통도 “북중 당국간 협의를 위해 방중했을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면서 미국이 북한의 제4차 핵실험 이후 고강도 대북제재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그의 미국행 가능성 역시 희박하다고 분석함.

■ “북 동창리에서 로켓발사준비 의심 움직임”(1/29, 38노스)

- 북한의 평안북도 동창리 서해 발사장에서 장거리로켓 발사 준비로 의심되는 움직임이 관측됐다고 ‘38노스’가 28일(현지시간) 밝힘.
- 매체는 지난 25일과 지난 18일, 그리고 그 이전에 촬영됐던 상업용 위성사진들을 비교한 결과 두드러지지 않지만 여러 종류의 활동이 있었다며 이런 의견을 냈음.
- 또한 매체는 29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발사대 크레인타워의 바닥 부근에 차량이나 장비로 보이는 물체 3개와 더불어, 발사대 주변에서 사람으로 추정되는 형체도 지난 25일 위성사진에 포착됐다고 설명함.

라. 대미국

- 北, 美언론에 DMZ 공개…‘대북방송 비난·평화협정 공세’ 목적(1/30, AP통신, 연합뉴스)
 - 미국 통신사 AP가 29일(현지시간) '북한 DMZ'발로 북쪽에서 바라본 비무장지대와 관문점 풍경, 군인들과의 인터뷰를 영상과 함께 상세히 보도했다고 연합뉴스가 30일 전함.
 - 북한이 미국 언론사에 대북 확성기 방송이 들려오는 비무장지대(DMZ)의 모습을 이례적으로 공개한 것은 한반도 긴장 고조의 책임을 남측에 돌리려는 시도로 분석된다고 뉴스는 밝힘.
 - 특히 AP가 촬영한 영상에는 우리 군(軍)의 대북 확성기 방송으로 보이는 음악 소리도 잡혔으며 전남수 인민군 상좌는 AP통신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대남 방송이) 없다”며 “미국의 사측(私屬)을 받는 남조선 괴뢰도당이 생역지를 쓴다”고 주장함.

마. 대중국

- 중국, 안보리 협의서 '대북 원유 수출중단' 반대(1/25, 교도통신)
 - 중국이 미국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에 포함된 북한으로의 원유 수출 중단에 반대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24일 보도함.
 - 중국은 미국 등 관계 각국과의 협의 과정에서 "(북한의) 일반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거론하며 대북 원유 수출 중단 방안에 반대하고 있다고 통신은 전함.
 - 북한의 제4차 핵실험(1월 6일)에 대해 미국이 작성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 초안에는 대북 원유 수출 금지, 북한으로부터의 광물 자원 수입 금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또한 북한 고려항공이 각국 영공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들어갔다고 교도통신은 전함.

바. 대일본

- 특이사항 없음.

사. 대러시아

- "북한 박명국 외무성 부상 방러 때 탈북자 송환 협정 체결"(1/29, 연합뉴스)
 - 북한 박명국(60) 외무성 부상이 29일부터 내달 3일까지 러시아를 방문한다고 러시아 외무부가 공식 발표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함.
 -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29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다음 달 2일 양국 간에 '불법 입국자 및 불법 체류자 수용·송환에 관한 정부 간 협정'이 체결될 것"이라고 소개하면서 박 부상의 방러 목적이 협정 서명을 위한 것이라 설명을 덧붙임.
 - 자하로바 대변인은 "해당 협정 서명의 러시아 측 당사자는 연방이민국"이라면서 "협정 체결이 양국의 법·조약적 (협력) 기반을 한층 강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뉴스는 전함.

아. 국제기구

- 유엔 “북한, 체포 이후 실종된 5명 행방 밝혀라”(1/30, 미국의소리)
 -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 당국에 체포된 이후 장기간 행방이 묘연한 북한 주민 5명에 대한 정보 제공을 북한측에 요청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30일 보도함.
 -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강제적 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이들 5명이 지난 2005년에서 2011년 사이 북한에서 체포된 이후 생사가 불투명한 상태라며 이같이 요구함.
 - 보고서는 북한이 지난해 7월 57건의 미해결 사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지만 이 정보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힘.

자. 기타 국가

- 北 김정은, 라오스 신임 대통령에 축전(1/25,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분냥 보라치트(78) 신임 라오스 라오인민혁명당(LPRP) 서기장에게 축전을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5일 보도함.
 - 김 제1위원장은 축전에서 “선대 수령들께서 마련하여주신 우리 두 당, 두 나라 사이의 전통적인 친선협조관계가 앞으로 사회주의를 위한 공동투쟁 속에서 더욱 강화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한다”면서 “당의 강화 발전과 나라의 번영을 위한 당신의 책임적인 사업에서 커다란 성과가 있을 것을 축원한다”고 밝혔다고 통신은 전함.
- 북한, 인도네시아대에 ‘김정은 강좌’ 개설 제안(1/26, RMOL, 자카르타포스트)
 - 26일 인도네시아 민영통신사 RMOL과 자카르타포스트 등은 북한 정부 대표단과 북한 대학 관계자들이 인도네시아대학을 방문해 최고지도자 김정은의 이름을 딴 강좌 개설을 제안했다고 보도함.
 - 북인도네시아대 국제교류담당 직원인 네스티 라하유(이네스)는 북한 정부와 북한 대학, 그리고 인도네시아대가 파트너십 체결에 합의했다며 “김정은 강좌는 북한 대학과 인도네시아대가 학생, 교직원, 강사 교환을 실행하기 위해 체결한 합의의 일부”라고 덧붙임.

- 핵실험 이후 北여행 금지·자제령 각국서 확산(1/27, 미국의소리)
 -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북한 여행 자제를 촉구하는 세계 각국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27일 보도함.
 - 방송은 캐나다와 스위스, 영국, 스페인, 독일 정부 등이 북한 여행을 금지하거나 자제하라는 조치를 잇달아 내렸다고 전함.

- '56년 혈맹' 북한-쿠바 더 가까워진다(1/29, 프렌사라티나)
 - 북한과 쿠바는 28일(현지시간) 쿠바 아바나에서 대외 무역과 연구·기술 분야 협력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쿠바 국영통신사 프렌사 라티나가 보도함.
 - 쿠바 대외무역·투자부의 로드리고 말미에르카 장관과 박창을 쿠바 주재 북한 대사가 대표로 서명했으며, 무역 협약은 상품의 물물 교환, 북한 철도 기술 및 설탕 정제 장비 수출 등의 내용을 담았다고 전함.
 - 협약 체결 후 말미에르카 장관은 “쿠바는 북한과 관계를 발전시킬 강력한 정치적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환영했으며, 박창을 대사도 협약 체결에 대한 만족감과 양국 관계의 강화 의지를 보였다고 통신은 전함.

- “인도네시아대, 김정은 강좌 개설 안 해”(1/29, 연합뉴스)
 - 북한으로부터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이름을 딴 강좌 개설 제안을 받은 인도네시아대학교 측이 이 제안을 수용할 의사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이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29일 보도함.
 -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29일 연합뉴스와 한 통화에서 “현지 언론에 보도된 북한의 제안과 관련해 대학교 측에 확인한 결과, 북한이 그런 제안을 한 적이 있지만 대학교 측은 이 제안을 수용할지를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고 보도함.
 - 대사관 관계자는 “인도네시아는 북한과 비교적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왔지만, 최근 북한 핵실험 후에는 성명을 통해 이를 비난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고립의 길로 가는 북한에 할 말은 하는 상황”이라며 “전세계가 북한의 행태를 비판하는 상황에서 김정은의 이름을 내건 강좌를 허용해 국제적으로 조롱거리가 되려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함.

- ‘일본이 국방예산을 대규모로 늘려 최신 군사기술 획득, 신형무장장비 구입, 해외에서의 군사연습에 열을 올리는 것은 또다시 군사대국화, 해외팽창의 길로 나가겠다는 것을 선언한 것’이라며 ‘현실을 똑바로 보고 분별없이 놀아대지 말라’고 주장(1.25, 중앙통신·노동신문·중앙방송)
- 김정은 黨 제1비서, 1월 22일 라오스 인민혁명당 중앙위 총비서에 선거된 ‘곤양월하’에게 축전(1.25, 중앙방송)
- 韓美 ‘상호 방위원조협정’ 조인(‘50.1.26) 관련 “미국은 조선반도의 군사적 긴장과 전쟁위기를 가중시켜온 주범(‘을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연습 등)”으로 규정 및 남한 당국 또한 ‘戰作權 전환 연기 등 對美 추종’을 비난하며 反美·反보수 투쟁 전개 선동(1.26, 중앙통신·노동신문)
- 미국 역사상 ‘미국內 총기류 사망 140만 명’ 외신 보도 인용, ‘미국 사회는 인간 생지옥’이라며 “미국은 남의 인권(※北인권문제 등)을 논하기에 앞서 제 집안일이나 돌아보아야 할 것”이라고 조소(1.26, 중앙통신·민주조선)
- ‘김정일 생일(2.16)’ 경축 재일조선인 예술단(단장: 장기생), 1월 26일 평양 도착(1.26, 중앙통신·중앙방송)
- 美 국제금융통화제도의 위기와 금융위기에서 오는 군사비 축감’을 거론 ‘미국은 날로 심화되는 내부모순으로 하여 붕괴의 운명에 놓이게 되었다’며 ‘21세기에 미국의 멸망을 똑똑히 보게 될 것’이라고 주장(1.27, 중앙통신·노동신문)
- 日 현 집권자 등 정객들 속에서의 위안부 피해자 망발들(직업적인 매춘부 등) 관련 ‘과거범죄를 대하는 뼈뿔어진 사고방식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것을 말해 준다’고 단죄하며 위안부범죄는 ‘日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중대한 정치적 과제’라고 강조(1.27, 중앙통신·민주조선)
- 김정은 黨 제1비서, 1월 27일 베트남 공산당 중앙위 총비서(웬 푸 쩌)에게 재선 관련 축전(1.28, 중앙통신)
- 미국의 핵무기 개발과 현대화 계획을 거론하며 ‘미국이 핵무기 없는 세계 건설을 떠는 것이야말로 파렴치성과 양면성의 극치’라며 ‘미국은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핵위험의 장본인, 군비경쟁의 주범’이라고 비난(1.28, 중앙통신·노동신문)
- 北 외무성 대표단(단장: 박명국 부상), 1월 29일 러시아 방문 위해 평양 출발(1.29, 중앙통신·중앙방송)
- 미국의 ‘남한에 핵무기 반입 발표 58년’ 관련 ‘한반도 핵문제는 미국의 對南 핵무기 반입으로 생겨났으며, 오늘 증대되는 핵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는 주범 또한 미국’이라며 ‘남한에서 핵무기 철수’를 주장(1.29, 중앙통신·민주조선)
- 北, 1월 25일 [스발바르 조약] 가입 및 同 조약 가입으로 “스발바르 제도에서 경제 및 과학연구 활동을 할 수 있는 국제법적 담보를 가지게 되었다”고 보도(1.29, 중앙통신)
- ‘미국은 한반도 핵문제 산생, 평화 유린, 핵전쟁의 위험을 고조시킨 주범’이라며 ‘조국통일 위업을 악랄하게 가로막은 것은 천추에 용납 못할 죄악’이라고 비난 및 ‘핵보유는 정당한 자위적 선택’이라고 지속 주장(1.30, 중앙통신·중앙방송)
- 日 정부 당국자들의 발언(한일 위안부 합의로 과거문제 법적으로 해결, 위안부 강제 연행 증거 없음 등)에 대해 ‘족제비도 낫을 뿜힐 철면피한 행위’라고 비난하고 ‘성노예 피해자는 우리(北)에게도 있다’며 사죄와 배상을 촉구(1.31, 중앙통신·노동신문)

2. 대내 정치

가. 김정은 동향

- 北 김정은, 방직공장 시찰…“다른 나라 가방제품에 견줄만”(1/28,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김정숙평양방직공장을 방문해 학생들이 사용할 가방 생산을 둘러봤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8일 보도함.
 - 김 제1위원장은 방문에서 여러 가방 제품과 생산공정을 둘러보고 “학생용가방들이 볼수록 멋있다. 형태와 색깔이 다양할 뿐만 아니라 편리성, 기능성, 미학성 등 모든 측면에서 다른 나라의 제품들과 당당히 견줄 수 있다”고 치하했다고 통신은 전함.
 - 김 제 1위원장의 이번 현지지도에는 안정수 노동당 경공업부 부장, 조용원 당 중앙위 부부장, 박명순 당 경공업부 부부장이 동행함.

- “北 김정은, 작년 잠수함 전력강화 지시”(1/29, 자유아시아방송)
 - 자유아시아방송(RFA)은 29일 복수의 함경북도 소식통을 인용해 “지난해 5월23일 김 제1위원장이 함경북도 청진시 노동당 기계공업부 산하 잠수함 건조공장인 청진조선소를 비밀리에 방문했다”고 보도함.
 - 소식통은 청진조선소 동력설계직장을 돌아본 김정은이 ‘현대전은 누가 잠수함을 더 많이 보유했는가에 따라 승패가 좌우된다’, ‘미래전쟁은 지상도 공중도 해상도 아닌 바닷속에서 펼쳐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함.
 - 이어 김 제1위원장은 “주변국 잠수전력에 대비해 여러 용도 잠수함을 압도적으로 보유해야 한다”며 “전략적 가치가 높은 대형 잠수함들과 전투용, 침투용 잠수함을 대량 건조해야 한다는 지시를 내렸다”고 방송은 보도함.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 특이사항 없음.

다. 공식 행사

- 北, '2017 백두산위인칭송대회' 준비작업 박차(1/25,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5일 “2017년 백두산위인칭송대회 아시아태평양 지역 준비위원회가 8일에 결성되었다”면서 “준비위원회 위원들로는 웰남(베트남), 인디아(인도), 방글라데슈(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필리핀, 네팔, 몽골, 타이(태국), 스리랑카 등 여러 나라의 각계 인사들이 망라되었다”고 보도함.
 - 신문은 마다브 쿠마르 네팔 전 네팔 총리를 포함해 하지 모하마드 수카르노 전 인도네시아 초대 대통령의 차녀인 라흐마와티 수카르노푸트리 등이 준비위원회 명예위원장을 맡았다고 소개함.

- “김정은 신년사 관철하자”…北단체들 ‘충성경쟁’(1/28, 조선중앙통신)
 - 북한 노동자단체인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는 28일 평양에서 제81차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열어 김정은 제1위원장의 “2016년 신년사에 제시된 과업을 결사 관철할데 대하여 토의하였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28일 회의에서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김정은 동지의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모든 직맹 조직들과 일꾼들이 자기 단위의 투쟁 목표를 통이 크게 세우며 그 관철을 위한 투쟁으로 동맹원들을 불러일으켜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를 승리자의 대회, 영광의 대회로 빛내이는데 적극 이바지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고 통신이 전함.

라. 주요 기관 행위

- 특이사항 없음.

마. 주요 구호 및 논조

- 北 “체육강국” 주장 기록영화 방영…김정은 리더십 부각(1/29, 조선중앙TV)
 - 조선중앙TV는 지난 27일 저녁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유별난 ‘체육 사랑’을 반영하듯 북한이 지난해 국내외 경기에서 거둔 성과와 체육계 동향을 총결산한 기록영화를 만들어 방영함.
 - 북한이 지난해 체육 분야에서 거둔 성과 등을 담은 기록영화 ‘체육강국의

2015'를 내보냈으며, 45분 길이의 이 동영상에는 김정은 제1위원장이 각종 체육시설을 방문하고 경기를 관람하는 모습을 포함해 2015 동아시아축구연맹 축구선수권대회(동아시아컵) 여자축구 우승, 국제 대회에서 북한에 다이빙 종목 첫 금메달을 안긴 김국향 선수 등의 모습 등이 담김.

- 박봉주(내각총리), 대안중기계연합기업소 현지 요해(1.25, 중앙통신·중앙방송)
- 김정은 지시 관철을 위한 청년운동사적관 종업원들의 쫓기모임, 1월 25일 전용남(청년동맹 위원장) 등이 참가한 가운데 현지에서 진행(1.26, 중앙방송)
- '조선이 시련과 난관을 뚫고 비약할 수 있는 근본 비결은 자강력을 필승의 무기로 틀어쥐고 투쟁해 온 데 있다'며 '자강력에 강성국가 건설의 승리가 있고 후손만대의 미래가 있다'고 재차 강조(1.27, 중앙통신·노동신문)
- 평양시 보통교육단위들, 교사건설 및 확장공사 추진중(1.27, 중앙통신)
-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창립('46.1.31) 70주년 기념 연구토론회, 1월 28일 리명길(「농근맹」 위원장) 등이 참가한 가운데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1.28, 중앙통신·중앙방송)
- 전체 당원들은 '黨 제7차 대회를 향한 총공격전에서 사명과 본분을 다해나가야 한다'며 "연속공격, 계속혁신, 계속전진으로 강성국가 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갈 것" 독려(1.29, 중앙방송·노동신문)
- 김정은의 서울류경수 제105탱크사단 시찰('12.1.1) 등 '인민군대 강화 의지 및 지난 4년간 인민군대의 전투력 강화 등 선군혁명영도 결실' 칭송(1.29, 중앙통신·노동신문)
- "우리(北)의 국력이 강하게 된 비결은 자강의 길에 있다"며 '자강력제일주의' 부각 및 "자강력이 제일이고 자강력에 의해 우리(北)는 자주와 정의의 길로 전진할 것"이라고 강조(1.29, 중앙통신·노동신문)
- 조영철(노동성 부국장), '올 겨울철 휴양은 15일간씩 2차례 진행(1기:1.29~2.12)과 자강도·평안남도·함경남도내 농업근로자들 묘향산 휴양소 등에서 겨울철휴양 시작' 전언(1.29, 중앙통신)
-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창립('46.1.31) 70주년 기념 중앙보고회, 1월 31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1.31, 중앙통신·중앙방송)

3. 경제

가. 정책 동향

- 북한에도 지방은행 생겼다…北매체 '함경북도은행' 소개 (1/28,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작년 12월 중순부터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들이 지방은행 관련 보도를 하기 시작했다고 전하며, 북한의 지방에는 국영인 조선중앙은행 지점들이 설치돼 있으며 보통 '중앙은행 ○○도은행'이나 '중앙은행 ○○지점'으로 불린다고 보도함.

- 실제로 노동신문이 전한 전국재정은행 일꾼대회 토론자 중에는 '중앙은행 함경남도 정평지점 과장' '중앙은행 평양시 대성지점 지배인' 등 중앙은행 지점 간부들이 포함돼 있었다고 뉴스는 설명함.
 - '함경북도은행'은 중앙은행 지점이 아니라 새로운 지방은행 조직으로 추정되며, 특히 '함경북도은행 총재'라는 직함은 상당한 독립성을 인정받는 자리임을 시사해 주목된다고 뉴스는 덧붙임.
- 북한 “토종브랜드 내고향, 아디다스·푸마에 안뒤져”(1/31, 조선의 오늘, 연합뉴스)
 - ‘조선의 오늘’은 31일 토종 스포츠용품 브랜드인 '내고향' 제품들의 품질이 세계적인 브랜드인 아디다스나 푸마에 못지 않다고 주장함.
 - 이 매체는 “체육용품이라고 하면 '아디다스'나 '푸마'와 같은 상표들만을 먼저 떠올리던 사람들의 인식 속에 '내고향'의 정다운 이름과 향기가 깃들고 있다”면서 최근 평양 문수거리에 문을 연 문수내고향체육용품상점은 계수나무 아래 달나라 토끼가 상표로 새겨진 '내고향'의 제품들을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있다고 매체는 설명함.
 - 북한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자력갱생'과 일맥상통하는 '자강력 제일주의'를 강조한 뒤 각종 매체를 동원해 자국산 브랜드 띄우기에 나서고 있다고 연합뉴스는 덧붙임.
- 北매체 “세계적 화장품 만들자”...‘은하수’ 브랜드 띄우기(1/28, 조선의오늘, 노동신문)
 - 북한의 대표적인 화장품 브랜드인 ‘은하수’가 세계적인 명품들과 품질 경쟁에 나서기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조선의 오늘’이 28일 보도함.
 - 매체는 28일 ‘은하수 화장품을 세계적인 화장품으로’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공화국의 평양화장품공장 일꾼(일꾼)과 노동자(노동자)들이 ‘은하수’ 화장품을 세계적인 화장품으로 만들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이고(벌이고) 있다”며 “공장에서는 ‘은하수’ 화장품을 세계적인 제품들과 어깨를 당당히 겨룰 수 있는 명제품, 인기제품으로 만들기 위한 높은 목표를 제기하고 그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밝힘.
 - 한편 노동신문은 같은 날 ‘명제품, 명상품을 더 많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가지 제품을 만들어도 세계와 당당히 겨룰 수 있게 최상의 수준에서 내놓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제품 하나하나를 세계에 소리치며 자랑할 수 있게, 조국과 인민 앞에 몇몇이 내놓을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함.

나. 주요 조치

- 北, 원산-금강산관광지대 풍력발전소 'BOT' 방식 추진(1/26, 연합뉴스)
 - 북한이 경제특구인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대' 내 풍력발전소를 'BOT(Built-Operate-Transfer)'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함.
 - 북한은 안내서에서 “풍력발전소들을 건설하여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 특히 통천지구와 금강산지구의 전력 수요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지역에 대한 초보적인 자원조사에 의하면 바람속도가 좋은 지역이 있으므로 풍력발전기들을 설치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하였다고 뉴스는 전함.

다. 경제 상황

- “北 칠보산관광 중단위기…핵실험·혹한 탓?”(1/25, 자유아시아방송)
 - 올해 들어 북한의 5대 명산 가운데 하나인 칠보산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감소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5일 보도함.
 - 방송에 따르면 함경북도 소식통은 “칠보산 관광을 다녀간 중국인들이 북한을 두 번 다시 가고 싶지 않은 관광지라고 지적한 이후에 관광객이 줄기 시작했다”며 “한 번에 평균 100여 명에 이르던 관광객들이 최근 20~30명으로 대폭 줄었다”고 주장함.
 - 소식통은 “그나마 새해 들면서 관광 신청자가 더 줄어들고 있어 칠보산 관광을 유지하기조차 어렵게 된 것으로 안다”면서 “추운 날씨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북한의) 갑작스러운 핵실험이 중국인 관광객을 더욱 움츠러들게 한 게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고 방송은 전함.
- 유니세프 “가뭄으로 北 아동 2만5천명 영양실조 상태”(1/27, 가디언)
 - 유엔 아동기금(UNICEF·유니세프)은 성명을 통해 지난해 북한의 곡물 생산이 전년대비 20% 줄었다면서 밝히면서, 지난해 북한의 가뭄으로 아동 2만5천명이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한 영양실조 상태에 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26일(현지시간) 전함.
 - 유니세프는 “가뭄 영향이 올해도 계속될 것이다. 곡물 배급량이 줄어들어 여성들과 아동들의 영양과 건강 상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전하며, “깨끗한

물을 공급하지 못하면 아동들이 설사할 위험이 크다. 설사는 영양실조와 사망으로 이어지는 주된 원인”이라며 “가장 심각한 가뭄 타격을 받은 지역들에서 5세 미만 아동들 사이에서 설사 발생이 72%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라. 대외 경제 관계

- 세계기금, 북한 말라리아 퇴치 사업에 880만달러 지원(1/29, 미국의소리)
 - 국제 질병 퇴치 기구인 ‘에이즈·결핵·말라리아 퇴치 세계기금’(이하 세계기금)이 올해부터 2018년 6월까지 880만달러(106억여원)를 투입해 북한의 말라리아 퇴치 사업을 벌이기로 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9일 보도함.
 - 북한 말라리아 퇴치 사업은 유엔아동기금이 현지 주민들에게 모기장을 나눠주고 각 가정에 살충제를 뿌리며, 예방약과 치료약을 나눠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방송은 전함.

- 지난해 북중 교역액 15% 줄어…2013년 이후 연속감소(1/29, 연합뉴스)
 - 지난해 북한과 중국 간의 교역액이 약 54억3천만 달러(약 6조 5천500억 원)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5% 가까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연합뉴스는 29일 보도함.
 - 매체가 29일 코트라 베이징무역관을 통해 입수한 중국 해관총서 자료에 따르면 북·중간 2015년도 교역액은 전년도(2014년)에 비해 14.7%가량 줄어든 54억3천40만8천 달러로 집계됐음.
 - 지난해 중국의 대북 수출액은 29억 4천646만 4천 달러로 전년도보다 16.35% 감소했으며, 중국의 대북 수입액은 24억 8천394만 4천 달러로 전년도에 비해 12.58% 감소했다고 뉴스는 설명함.

- 北-中 접경 라오닝성에 독일 기업들 투자 활발(1/30,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30일 코트라(KOTRA) 선양무역관에 따르면 현재 라오닝성에서 활동하는 외국 기업 중 독일 기업이 132개로 가장 많고 2014년 무역총액 50억2천만 달러(약 6조466억)를 달성하는 등 최다액을 기록했다고 30일 보도함.
 - 독일 중소기업연합 회원사 3천개 중 30개 이상이 라오닝성 중소기업과 합작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 3년새 독일이 투자한 프로젝트는 415건에 달한다고 뉴스는 전함.

- 특히 랴오닝성 성도인 선양(瀋陽)에 ‘중국-독일 중장비 혁신 시험공단’이 건설 중이며 자동차회사인 BMW를 비롯해 세계 500대 기업에 속하는 독일 기업 8개가 14개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있다고 덧붙임.

- 北 적십자종합병원 심장전문병원에서 ‘급성 대동맥해리에 대한 첫 수술 성공’ 및 이는 “대혈관 외과의 기술수준을 높이는데 큰 돌파구로 된다”고 주장(1.26, 중앙통신)
- 각지 온실들에서 ‘살균면역제(모든 균병·세균병 구제, 인체 무해) 도입(김일성종합대학 평양농업대학 연구집단 개발) 및 온실 남새와 알곡작물 등 농업생산 성과’ 선전(1.26, 중앙통신)
- 北, 과학기술전당으로 각계층 근로자·청소년 학생들 등 참관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선전(1.27, 중앙방송)
- 「과기총, 중앙위 제154차 전원회의 확대회의, 1월 27일 최태북(黨비서)·계희남(과학기술총연맹 중앙위 부위원장)등이 참가한 가운데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1.27, 중앙통신)
- 국가과학원, 농부산물과 집짐승 부산물을 이용한 ‘복합균 영양 먹이첨가제’ 개발(1.28, 중앙통신)
- 김일성종합대학, ‘양자암호 통신기술’ 개발(1.31, 중앙방송)

4. 사회

가. 공식 발언 및 주요 조치

- 특이사항 없음.

나. 시장 관련

- 북한 노점상 집중 단속에 주민들 반발(1/27,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이 ‘골목장(노점상)’을 없애는 정책을 펼치면서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7일 보도함.
 - 복수의 북한 소식통들은 방송에 ‘외국 관광객이 보면 망신스러우니 골목장을 없애라’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지시에 따라 북한 당국이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전국의 일명 ‘메뚜기’라 불리는 골목장사꾼들을 집중적으로 단속했다고 밝힘.
 - 이어 소식통들은 “이들은 북한에서 제일 취약한 계층으로 하루벌이로 생계를 유지하는데 장마당의 자리를 구할 수 없고 장세를 낼 형편도 되지 않는다”며 “생계를 이어갈 한 가닥 줄마저 잃게 된 하층 주민들이 강력히 저항했다”고 설명함.

다. 국경통제 및 탈북 관련

- 北 억류 김국기 “中 활동 선교단체, 국정원 지시받아”(1/26, 우리민족끼리)
 - 북한에 억류 중인 우리 국민 김국기씨는 26일 북한의 우리 민족끼리 TV가 홈페이지에 올린 15분 남짓한 영상에서 중국에서 활동 중인 선교 단체의 이름을 거론하며 이들이 “국정원의 지령과 조종, 후원 밑에서 반공화국 모략책동, 인권 모략책동을 감행하는 데 적극 가담하고 있다”고 주장함.
 - 이어 그러면서 “남쪽 기독교 지도자들이 모임을 갖든지 대표자를 세워 공화국(북한)에 정식 사과문 띄우고 그 이후로 기독교계를 철저히 단속해서 (교회가) 거짓증언 하는 장소가 안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라고 덧붙임.

- 중국, 북중 접경지에 탈북 방지 철조망 증설(1/28, NK뉴스)
 - 중국이 최근 5개월 새 북한과 접경지역에 탈북자들을 막기 위한 철조망을 증설했다고 NK뉴스가 28일 보도함.
 - NK뉴스는 28일 “중국이 북한과 무역 거점인 투먼(圖們) 인근 지역에 새로운 철조망을 설치한 사실을 현지답사를 통해 확인했다”고 전함.
 - 한 북한 인권단체 관계자는 NK뉴스에 “북한은 보안 요원과 감시 시설을 늘렸다”면서 “중국은 감시 카메라를 더 많이 설치했으며, 북중 양측 모두에서 철조망도 전보다 늘어났다”고 말했다고 전함.

라. 각종 단속 및 검열

- 북한 공무원, 중국 출장시 지정된 호텔에만 투숙(1/26, 자유아시아방송)
 -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중국 변경도시 한 무역업자가 “북한에서 출장나온 공직자들을 자주 접대하고 있다”며 “이들은 당국에서 정해진 몇 개 호텔에 투숙해야 하며 현지에서 임의로 호텔을 바꿀 수 없다”고 말했다고 보도함.
 - 이 무역업자는 “중국 선양시의 경우 북한이 직접 운영하는 칠보산호텔이 있어 북한 출장자들이 대부분 이곳에서 투숙하고 단둥시는 이름을 밝히기는 곤란하지만 약 5개 정도 호텔에 투숙하고 있다”며 “투숙 호텔은 남한 사람들이 별로 없고 남한 위성 텔레비전 방송도 나오지 않는 호텔들이다”라고 설명했다고 방송은 전함.

- 이어 그는 북한 당국이 출장자들의 투숙 호텔을 지정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혹시 남한 사람 등 외부인과 접촉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목적”이라고 지적했다고 설명함.

마. 사회 동향

- “北 미래과학자거리 아파트 부실 공사에 입주 기피현상” (1/27, 데일리NK)
 - 북한이 '김정은 시대의 자랑찬 창조물'로 극찬하는 평양의 대규모 주택단지인 미래과학자거리 살림집(아파트)에 전기 공급과 난방이 제대로 안 돼 주민들이 입주를 꺼리고 있다고 데일리NK가 27일 북한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함.
 - 평안남도 소식통은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11월에 준공된 미래과학자거리 살림집에 “전기 공급이 제대로 안 돼 북한 당국이 10층 이하는 승강기를 이용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고 밝히며, “난방이 되지 않고 온수도 나오지 않아 살림집 내부가 냉동기(냉장고) 안처럼 퐁퐁 얼어있는 곳도 많다”며 “올겨울 기록적인 한파가 예상됨에 따라 동사(凍死)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말함.
 - 매체는 이런 사실이 전해지자 “살림집 배정을 받은 주민들이 입주 자체를 꺼리거나 입주 시기를 봄으로 미루고 있다”며 “특히 10층 이상의 살림집에 배정받은 주민들 중에는 입주하지 않겠다는 사람이 늘고 있다”고 전하면서 무리한 속도전으로 공기를 앞당긴 아파트의 부실과 날림 공사를 우려한 주민들은 고층으로 올라가지 않으려고 한다고 덧붙임.
- 北 매체, 왜 역도산 띄울까...핵실험 대북제재 의식한 듯(1/28, 조선의오늘, 연합뉴스)
 - ‘조선의 오늘’은 27~28일 ‘세계프로레슬링왕자-김신락’이라는 제목의 시리즈 기사에서 역도산의 업적을 집중 조명했으며, 기사는 1회에서 역도산이 일본인이 아닌 고향이 함경남도인 ‘조선사람’임을 강조하고 2회에서는 본격적으로 그의 시합 기록을 소개함.
 - 이는 역도산을 불리한 조건을 극복하고 서방을 무릎꿇린 영웅으로 상징화함으로써 자신들도 제4차 핵실험 이후 가시화하는 미국 등의 경제제재를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드러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고 연합뉴스는 설명함.

- 北 인민배우 주창혁 사망…김정은 조화 보내(1/28,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8일 북한의 유명 성악배우 주창혁이 사망했다고 보도함.
 - 통신은 그의 구체적인 사망일자는 밝히지 않은 채 “김정은 동지가 만수대예술단 성악 고문인 인민배우 주창혁 동지의 서거에 깊은 애도의 뜻을 표시해 28일 고인의 영전에 화환을 보냈다”고 전함.

- “北 외부세계 연결 인터넷 이용률 세계 최저”(1/29, 미국의소리)
 - 북한에서 외부 세계와 연결되는 인터넷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비율이 전세계 최저 수준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29일 보도함.
 - 국제 마케팅 업체인 ‘위아소셜(WeAreSocial)’은 최근 발표한 ‘디지털 인 2016(Digital in 2016)’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외부세계와 연결된 인터넷 이용자가 북한 전체 인구의 0.03% 수준인 약 7천명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고 방송은 전함.

- 보건부문, 중앙과 지방의 위생방역 기관들 간 실시간 감시통보체계 확립(1.31, 중앙방송)

© 북한연구실 제공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美관리, 北, 탄도미사일 아닌 위성-우주발사체 발사 준비하는 듯(1/29, 연합뉴스)
 - 북한이 로켓 발사를 준비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AFP 통신이 28일(현지시간) 미 국방관리의 말을 인용해 보도함.
 - 익명의 이 관리는 “(위성사진 등) 최근 정황을 보면 북한이 모종의 발사를 준비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것이 위성일 수도 있고 우주발사체일 가능성도 있고 현재 여러 추측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탄도미사일과 관련된 것임을 암시하는 내용은 아무것도 없다.”고 덧붙임.
 - 이와 관련, 한 미국 관리는 로이터 통신에 ‘2주내 발사’ 가능성을 전하면서 “우리의 우려는 설령 그것이 우주발사체라고 하더라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같은 기술을 활용하는 점”이라고 지적함.

- 미국 38노스, 북 동창리에서 로켓발사준비 의심 움직임(1/29, 연합뉴스)
 - 북한의 평안북도 동창리 서해 발사장에서 장거리로켓 발사 준비로 의심되는 움직임이 관측됐다고 미국의 북한전문 웹사이트 ‘38노스’가 28일(현지시간) 밝힘.
 - 38노스는 지난 25일과 지난 18일, 그리고 그 이전에 촬영했던 상업용 위성 사진들을 비교한 결과 두드러지지는 않지만 여러 종류의 활동이 있었다며 이런 의견을 냈음.
 -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38노스는 발사대 크레인타워의 바닥 부근에 차량이나 장비로 보이는 물체 3개와 더불어, 발사대 주변에서 사람으로 추정되는 형체도 지난 25일 위성사진에 포착됐다고 설명하였음.

- 미 CNN, 북한, 수소폭탄 구성요소 실험했을 가능성(1/29, 연합뉴스)
 - 북한이 지난 6일 실시한 4차 핵실험은 실제 수소폭탄을 구성하기 위한 일부 요소의 실험이었을 수 있다고 미국 CNN 방송이 28일(현지시간) 보도함.

- CNN은 한 미국 관리의 말을 인용해 “수소폭탄(제조)과 관련된 어떤 형태의 실패한 실험이거나, 또는 부분적인 시도였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 방송은 핵실험 정보에 대한 최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이번 언급이 나왔으면서도, 아직 북한 핵실험 정보에 대한 분석이 마무리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고 덧붙임.
- CNN은 미국 당국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이 이뤄진 지점의 깊이를 당초 추정했던 곳보다 2배 이상 깊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며, 북한에서는 자신들이 수소폭탄 실험을 한다고 믿었을 수 있다고 설명함. 또한, 지질학적 계측 결과나 4차 핵실험 이후 수집된 다른 정보들은 이번 핵실험이 제대로 작동한 수소폭탄에 의한 것이 아니었음을 보였다고 CNN은 덧붙임.

나. 미·북 관계

- 북한, “국제유가 하락은 미국의 책동 때문” 주장(1/27, 연합뉴스)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최근 시기에 원유가격의 파동이 심하게 나타난 데는 세계경제장성(성장) 속도가 굼떠져 국제시장에서 원유에 대한 수요가 낮아진데도 원인이 있다.”면서 “하지만 일부 분석가들은 그 주되는 원인을 국제원유시장을 장악하려는 미국의 책동에서 찾고 있다.”고 보도함.
 - 신문은 “원래 미국은 전통적으로 다른 나라에서 원유를 수입하며 생존하여 왔다.”면서 “그러나 지금은 세계적인 원유생산국으로 되고 있다. 혈암유(암반속 원유)를 대대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설명함.
 - 이어 “미 공화당은 수년전부터 원유수출금지조치를 해제하기 위해 모지름(안간힘)을 써오던 끝에 지난해 12월 미 국회 상하량원에서 드디어 원유수출금지조치해제안을 통과시켰다.”면서 “법적 장애물을 제거한 미국의 혈암유생산업자들은 원유생산량을 최대한 늘이는 방법으로 국제원유가격을 떨구어 저들이 손해를 보더라도 국제원유시장에서 패권을 쥐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함.
- 김정은 정당성 문제, 북 사이버공격 대응수단 기능(1/28, 연합뉴스)
 - 앞으로도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북한의 사이버공격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북한 김정은 정권의 정당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효과적일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음.
 - 미국 정책연구기관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27일(현지시간) ‘북한 사이버작전: 전략과 대응’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지도부의 인격적 측면이나 김정은 일가에 대한 외부의 비판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여 왔다.”며 이같이 제안함.

- 이 보고서는 “북한에 대한 사이버 반격은 북한이 미국이나 한국에 가하는 공격과 상응하는 효과를 낼 수 없다.”며 “북한 고유의 취약점이나 민감성을 활용한” 대응이 북한에 대해 비대칭적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였음. 또한, 보고서는 북한이 “자국민에 대한 외부 정보 통제에 대해 강박증을 갖고 있다.”며 “디지털 정보 형태의 (외부) 정보를 꾸준히 북한 내부로 유입시키는 일”이 북한의 불법적인 사이버공격 행위를 억제하는 수단 중 하나일 수 있다고 밝힘.

■ 미국방부, 北 미사일 도발 자제하라(1/28, 연합뉴스)

- 미국 국방부는 27일(현지시간)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준비 중이라는 언론 보도와 관련, 도발 자제를 거듭 촉구함.
- 빌 어번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연합뉴스의 논평 요청에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행동이나 언급을 자제하고 대신 국제적 의무와 약속을 이행하는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북한에 촉구한다.”고 밝힘.
- 또한, 어번 대변인은 “우리는 북한의 추가 도발이 긴장을 고조시키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할 수 있음을 우려한다.”고 언급하였으며, “정보 사안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며 미사일 발사설의 진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삼간 것으로 전해짐.

■ 유엔주재 미국대사, 대북제재 결의안 매우 복잡…시간 더 필요(1/29, 연합뉴스)

- 서맨사 파워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27일(현지시간) “북한의 4차 핵실험과 관련한 대북 제재 강화를 위한 결의안 초안 협상은 매우 복잡하며 실질적인 안을 마련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밝힘.
- 파워 대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한 제재 논의”라며 “모든 당사자가 북한과 지역 내 다른 행위자들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지를 고려하려고 한다.”고 설명함. 또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은 놀랍지 않다.”며 “다만 오늘 존 케리 국무장관이 말한 것처럼 실질적인 안을 마련하기 위해 협상 속도를 높이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고 덧붙임.
- 한편, 북한이 곧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선 “임박한 추가적 도발 혹은 안정을 해치는 행위는 이 제재 결의안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과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할 뿐”이라고만 밝혔음.

- 미국 상원 대북제재안, 하원 통과 법안보다 강력할 것(1/29, 연합뉴스)
 - 미국 상원에서 마련되는 북한 제재 법안에 하원을 통과한 법안보다 강화된 내용들이 담길 것이라고 미 상원 외교위 소속 의원들이 전망함.
 - 28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언론들에 따르면 밥 코커(공화·테네시) 상원 외교 위원장은 전날 상원 대북제재 법안의 수위에 대한 질문에 “그것(하원 법안)을 상당히 강화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하였음. 상원 외교위원회의 민주당 간사인 벤 카딘(메릴랜드) 의원도 “여러 면에서 하원 법안보다 강한 법안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음.
 - 현재 상원 외교위원회에 상정된 대북 제재법안에는 북한의 지하자원이나 귀금속 수출을 제재하는 내용이 담길 수 있다고 미국 언론들은 전망하였으며, 외교위 소속 상원의원들은 북한 인권 문제도 제재 법안에서 다뤄질 가능성을 언급하였다고 전해짐.

- 美 국무차관보, 핵정책 바꾸려면, 북에 대가 치르게 해야(1/30, 연합뉴스)
 - 북한의 핵개발 정책을 바꾸도록 하려면, 북한 정권이 핵개발 강행에 따르는 “대가를 치르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미국 국무부의 토머스 컨트리맨 국제 안보·비확산담당 차관보가 밝힘.
 - 29일(이하 현지시간) 미 국무부에 따르면 컨트리맨 차관보는 전날 전화 기자 간담회에서 “미국과 협력국들이 해온 노력을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속도가 분명히 늦어졌지만, (북한 핵개발을) 완전히 중단시키지 못한 점도 분명하다.”면서 이같이 주장하였음. 또한, “실제로 특별히 북한에 대해 논의 했다.”면서 “우리는 PSI를 통해 사용 가능한 모든 수단과 더불어 다른 국제 협의 체제에 따라, 높은 수준의 (WMD 관련) 기술이 북한으로 수출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는데 동의했다.”고 언급함.
 - 기자간담회를 통해 그는 지난 27일 워싱턴D.C.에서 열린 대량살상무기확산 방지구상(PSI) 참가국 준고위급회의 내용을 설명함. 이 회의에는 주최국인 미국과 한국을 비롯해 약 70개국 대표단이 참석하였음.

- 북한, 미국, 남조선에 대한 사드 배치 노골화 비난(1/31, 연합뉴스)
 - 북한은 31일 미국이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를 노골화하고 있다고 비난함.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미국은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대한 미군 무력증강에 커다란 우려를 품고있는 러시아와 중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남조선에 대한 ‘사드’ 배비(배치) 기도를 노골화하였다.”고 밝힘.
- 신문은 이어 “미국의 미사일방위체계 구축 책동은 대국들에 대한 전략적 우세를 차지하며 이 나라들을 압박해보려는 어리석은 기도로서, 세계평화와 안전을 더욱 위태롭게 할 뿐”이라면서 “미국의 야심적인 미사일방위체계 수립 책동을 강 건너 불보듯 방치할 나라가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고 주장하였음.

다. 중·북 관계

- 중국, 안보리 협의서 ‘대북 원유 수출중단’ 반대(1/25, 연합뉴스)
 - 중국이 미국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에 포함된 북한으로의 원유 수출 중단에 반대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24일 보도함.
 - 중국은 미국 등 관계 각국과의 협의 과정에서 “(북한의) 일반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거론하며 대북 원유 수출 중단 방안에 반대하고 있다고 교도는 전했다.
 - 북한의 제4차 핵실험(1월 6일)에 대해 미국이 작성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 초안에는 대북 원유 수출 금지, 북한으로부터의 광물 자원 수입 금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짐. 또 북한 고려항공이 각국 영공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들어갔다고 교도통신은 전하였음.
- 시진핑 중동 순방에는 북한 압박 의도도 포함(1/25, 연합뉴스)
 -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의 최근 중동 방문에는 제4차 핵실험으로 동북아 위기를 다시 촉발한 북한에 대한 압박 의도도 포함돼 있다는 관측이 나옴.
 - 시 주석은 북핵 실험으로 양국 관계에 위기가 고조됐으나 대북 유화 정책을 전환할 수도 없는 딜레마 속에서 중동에서 국익을 추구하면서 북한에 압박을 가하기 위해 이번 순방 길에 올랐다고 미국에 서버를 둔 중화권 매체 보쑤(博迅)이 24일 소식통들을 인용해 보도함. 보쑤는 중국이 북한의 공공연한 도발에도 실질적으로 북한을 제재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 압박이 가해지자 베이징을 잠시 떠났다고 분석하였음.
 - 시 주석의 이번 중동 방문은 당초 시 주석의 ‘외교안보 사령탑’인 양제츠 외교담당 국무위원이 작년 초 건의한 것이며, 중동 지역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강화와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 난관 돌파가 주목적인 것으로 알려짐.

- 중국, 북중 접경지에 탈북 방지 철조망 증설<美매체>(1/28, 연합뉴스)
 - 중국이 최근 5개월 새 북한과 접경지역에 탈북자들을 막기 위한 철조망을 증설했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 인터넷 매체인 NK뉴스가 28일 보도함.
 - NK뉴스는 이날 “중국이 북한과 무역 거점인 투먼(圖們) 인근 지역에 새로운 철조망을 설치한 사실을 현지답사를 통해 확인했다.”고 전했다. NK뉴스를 안내한 현지 운전사는 “지난해 8월 여기에 왔을 때까지만 해도 이 철조망들은 없었다.”고 밝혔다고 전해짐.
 - 한편, 북한도 지난 2011년 말 김정은 집권 후 북중 국경 지역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온 것으로 알려짐.

- 북한 주재 중국 대사 공개활동 재개…핵실험 충격 벗어났다(1/29, 연합뉴스)
 - 북한의 제4차 핵실험을 전후해 자취를 감췄던 리진권(李進軍) 주북 중국대사의 공개활동이 다시 활발해지고 있음.
 - 이를 두고 지난 6일 북한의 제4차 핵실험의 충격에서 다소 벗어나 북중 관계에 서서히 복원 조짐이 나타나는 것 아니겠느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실정임. 29일 주북 중국대사관 홈페이지를 확인한 결과 리 대사의 대외 활동에 관한 발표문은 이달 하반기에 총 3건이 올라왔음.
 - 이는 핵실험을 전후해 대사관이 공개활동 발표문을 단 한건도 올리지 않았던 것과 대비되는 것임.

- 中 전문가, 北 정권 붕괴가 대북제재 목적에선 안 돼(1/29, 연합뉴스)
 - 중국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가 관영 언론을 통해 “북한 정권을 붕괴시키는 것이 대북 제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과도한 수위의 대북 제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피력함.
 - 리카이성(李開盛) 상하이(上海) 사회과학원 국제관계연구소 연구원은 29일 관영 환구시보(環球時報)에 게재된 칼럼에서 “북핵 문제를 명목으로 북한 정권을 붕괴하도록 압박한다면 지역의 정치상황을 복잡하게 만들고 북핵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함.

- 리 연구원은 “일부 국가의 정책들은 대북 제재 확대를 중국을 불구덩이로 던져 놓고 쪼어 말리는 게임으로 여기고 있다.”며 미국 등의 대중 압박을 비판함.
- 북한 핵라인 ‘대외행보’ 착수…최설희 외무성 부국장 ‘방중’(1/29, 연합뉴스)
 - 북한의 6자회담 차석대표인 최설희 북한 외무성 미국 담당 부국장이 중국 베이징(北京)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짐.
 - 북수의 베이징 소식통들은 29일 “최 부국장이 28일 오전 베이징(北京) 서우두 국제공항을 통해 중국에 입국하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전함. 최 부국장은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 6자회담 수석대표인 리용호 외무성 부상 등과 함께 북한의 대표적인 ‘북핵라인’으로 꼽히는 인물임.
 - 한 대북 관측통은 “북중 당국간 협의를 위해 방중했을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면서 미국이 북한의 제4차 핵실험 이후 고강도 대북제재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그의 미국행 가능성 역시 희박하다고 분석하였음.
- 중기관지 환구시보, 北, 위협의 극한으로…중국 보호 기대말라(1/30, 연합뉴스)
 - 중국 관영언론이 30일 북한이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로켓) 발사 행보에 돌입한 데 대해 “그것이 사실이라면 (북한이) 위협의 극한으로 다가가고 있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난함.
 - 외교 현안에 대한 중국정부 입장을 대변해온 관영 인민일보 자매지 환구시보(環球時報)는 이날 ‘조선(북한)의 원폭·수폭은 자신들에 대한 위협성을 더욱 키울 뿐’이라는 사실을 통해 북한은 자기 능력을 ‘과대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함.
 - 이어 북한은 핵탄두와 장거리미사일이 실전 수준에 가까워질수록 한·미·일도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여길지 모르지만, “그런 ‘승리’가 가까워진 상태야말로 진짜 위험하다.”고 지적하였음. 이런 중국의 발언은 언제든지 ‘게임의 규칙’을 바꿀 능력이 있는 미국이 ‘현상유지’가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순간 북한에 대한 군사 조치 등을 동원할 수 있다는 뜻임.
- 中, 北 무기개발 지원…北 제재 동참 어려워(1/31, 연합뉴스)
 -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가 중국의 대북 제재 동참을 촉구하고 있지만 중국이 북한의 무기 개발을 막후에서 지원하는 만큼 미국 주도의 대북 제재에 동참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었음.

-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9일(현지시간) ‘핵확산과 관련한 중국의 표리부동(China’s Proliferation Double Game)’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북한은 지난 수십 년 동안 특수강, 정밀 연마기 등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물품을 중국 기업에 의존해 왔다.”며 이 같이 보도함.
 - WSJ는 “북한 항공기는 의심스러운 화물을 실어 나르면서 중국 영공과 연료 공급 시설을 이용했고, 북학 선박은 중국을 거쳐 이란과 다른 지역으로 무기와 미사일 기술을 밀매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함.
- 작년 北-中 무역 두 자릿수 감소…냉랭한 정치관계 영향(1/31, 연합뉴스)
- 지난해 북한과 중국 관계가 악화한 영향으로 무역규모도 큰 폭으로 감소했다는 분석이 나옴.
 - 이종규 한국경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31일 ‘KDI 북한경제리뷰 1월호’에 실린 ‘북한의 대외무역: 2015년 평가 및 2016년 전망’ 논문에서 지난해 1~11월 북중 무역이 전년 동기 대비 총 14.8% 감소한 49억900만 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힘.
 - 북한의 대(對) 중국 수출은 12.3% 적은 22억7천900만 달러, 수입은 16.8% 감소한 26억3천만 달러로 모두 두 자릿수가 줄었는데, 이는 2000년대 들어 처음 있는 현상임. 이와 관련, 작년 중국으로의 북한 수출이 감소한 것은 무연탄(-6.3%)과 철광석(-68.5%) 등 지하자원의 수출부진이 주요 요인이라고 분석됨.

라. 일·북 관계

- 日, 독자제재로 북한 자산동결 대상 확대 검토(1/27, 연합뉴스)
- 일본 정부가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독자적인 대북 제재 방안으로 금융 자산동결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산케이신문이 27일 전하였음.
 - 일본 정부의 추가 대북 제재는 두 가지 축으로 나뉘어 검토되고 있는데, 2014년 북한과 납치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에 합의한 이후 완화한 제재의 원상복구, 그리고 이와는 별도의 추가 제재임.
 - 먼저 3천만 엔(약 3억374만원) 초과액을 북한에 송금하거나 100만엔 초과 현금을 갖고 북한에 입국할 경우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했던 것을 종전처럼 300만엔 초과 대북 송금 및 10만 엔 초과 현금 소지 입국 시 신고 의무화로 강화하는 것이며, 북한국적 선박 입항 금지, 북한국적자의 입국 금지, 방북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간부의 재입국 금지, 일본인의 북한 방문 자제요청 부활도 포함되었음.

- 다른 한 축으로 일본 정부는 방북자 가운데 재입국 금지 대상을 핵·미사일 기술자까지 넓히고 금융자산 동결 대상도 확대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음.
- 북한 매체, 日정치인 ‘위안부·독도’ 망언 성토(1/27, 연합뉴스)
 - 북한의 내각 기관지인 민주조선은 27일 ‘정신병자들의 히스테리적 발작’이란 글에서 “얼마 전 일본 자민당 국회의원인 사쿠라다 요시타카(櫻田義孝) 라는 자가 자민당의 외교관계 합동회의에서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을 ‘직업적인 매춘부’라고 모욕하며 ‘그들을 희생자처럼 대하고 있는 선전 공작에 (일본은) 지내 기만당하고 있다.’라는 망발을 늘어놓았다.”고 지적하였음.
 - 이어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에게 사죄의 말 한마디는 못할망정 매춘부라고 모독하였으니 이것이 과연 사람이 할 짓인가”라며 “결국 이것은 그들에게 두 번 다시 치욕을 안기는 또 하나의 범죄 행위로 된다.”고 비난하였음.
 - 또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이 지난 22일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북한이 “후안무치의 극치”라며 거세게 비판함. 북한은 “일본 외상 기시다가 국회에 얼굴을 들이밀고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 라느니, ‘끈질기게 대응할 것’ 이라느니 뭐니 하는 나발까지 불어댔다.”면서 “실로 후안무치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고 강력 성토했음.
- 日, 이지스함 배치·방위상 출장취소…北미사일 경계 강화(1/29, 연합뉴스)
 - 일본 정부는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 징후가 포착된 것과 관련해 이지스함을 해상에 배치하는 등 경계·감시를 대폭 강화하고 있음.
 - 특히 방위 정책 총책임자인 나카타니 겐(中谷元) 방위상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만일의 사태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이번 주말 예정됐던 오키나와(沖縄)현 방문도 취소했다고 NHK가 29일 전했다.
 - 앞서 일본 정부는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 임박 가능성이 제기된 지난 28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각료회의를 소집하고 대책을 논의하였으며, 이 자리에서 일본 정부는 한미 등 관계국과 연대해 정보 수집과 경계·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전해짐.

- 일본 방위성, 북한 미사일 발사 대비 PAC3 배치 늘린다(1/31, 연합뉴스)
 - 일본 방위성과 자위대는 북한의 장거리탄도미사일 발사에 대비해 지대공 유도 미사일 패트리엇(PAC3)를 각지에 배치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31일 전함.
 - 일본의 항공자위대는 지난 30일 도쿄 이치가야(市谷) 소재 방위성 내에 배치된 PAC에 요격태세를 갖추도록 지시해 현재 북서 방향 상공으로 발사구를 열어놓았음.
 - 이는 나카타니 겐(中谷元) 방위상이 자위대법에 근거해 발령한 ‘과괴조치명령’에 따른 후속 조치로, 방위성은 앞으로 미사일이나 관련 부품이 날아올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PAC3를 추가 배치할 예정으로 알려짐.

마. 러·북 관계

- 북한 박명국 외무성 부상 방러 때 탈북자 송환 협정 체결(1/29, 연합뉴스)
 - 북한 박명국(60) 외무성 부상이 29일부터 내달 3일까지 러시아를 방문한다고 러시아 외무부가 공식 발표함.
 -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29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확인하면서 “다음 달 2일 양국 간에 ‘불법 입국자 및 불법 체류자 수용·송환에 관한 정부 간 협정’이 체결될 것”이라고 소개하였음. 박 부상의 방러 목적이 협정 서명을 위한 것이란 설명임.
 - 러시아와 북한이 서명하려는 협정은 지난 2014년부터 양국이 준비해온 것으로 ‘불법 월경이 의심되는 사람이 합당한 서류를 소지하지 않고 있으면 체류국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송환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협정에는 또 송환 경비, 관련 서류 작성 등의 상세한 절차가 명시돼 있다고 전해짐.

바. 기타

- ‘56년 혈맹’ 북한-쿠바 더 가까워진다(1/29, 연합뉴스)
 - 북한과 쿠바는 28일(현지시간) 쿠바 아바나에서 대외 무역과 연구·기술 분야 협력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쿠바 국영통신사 프렌사 라티나가 보도함.
 - 쿠바 대외무역·투자부의 로드리고 말미에르카 장관과 박창을 쿠바 주재 북한 대사가 대표로 서명함.

- 무역 협약은 상품의 물물 교환, 북한 철도 기술 및 설탕 정제 장비 수출 등의 내용을 담았음. 협약 체결 후 말미에르카 장관은 “쿠바는 북한과 관계를 발전시킬 강력한 정치적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환영했음.
- 유엔, 북한, 체포 이후 실종된 5명 행방 밝혀라(1/30, 연합뉴스)
 -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 당국에 체포된 이후 장기간 행방이 묘연한 북한 주민 5명에 대한 정보 제공을 북한 측에 요청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30일 보도함.
 -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강제적 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이들 5명이 지난 2005년에서 2011년 사이 북한에서 체포된 이후 생사가 불투명한 상태라며 이같이 요구하였음. 보고서는 북한이 지난해 7월 57건의 미해결 사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지만 이 정보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힘.
 - 한편, 이 단체는 이와 별도로 중국 당국에 체포된 뒤 강제북송된 북한 주민 9명에 대한 정보를 중국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짐.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미국 국무부, 5자회담은 기회 지지 표명(1/28, 연합뉴스)
 - 미국 정부는 27일(현지시간)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당사국 간의 5자회담을 제안한 것에 대해 지지를 표명함.
 - 마크 토너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5자회담 관련 질문에 대해 “5자회담은 북한의 행동에 대해, 또 북한을 설득하거나 북한의 태도를 바꾸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동의하는 우리에게는 기회”라고 긍정 평가하였으며, 이어 “우리는 항상 이런 논의를 하며 다른 당사국들과 양자, 다자 간에 북한이 태도를 바꾸도록 논의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이런 대화들을 지지한다.”고 말했음.
 - 한편, 주한 미국대사관 대변인은 앞서 지난 23일 연합뉴스에 보낸 성명에서 “미국은 5자회담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요청을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음.

- 국방부, 美서 사드배치 협의요청 없다…주한미군 배치 안보도움(1/29, 연합뉴스)
 - 국방부는 29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의 주한미군 배치 문제와 관련해 미국 정부로부터 협의 요청을 받은 바 없다고 밝힘.
 -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주한미군 사드 배치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미국 정부로부터 협의 요청을 받은 바 없다.”면서 “미국 정부 내에서 주한미군 사드 배치 논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밝힘.
 - 또한, 김 대변인은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 등 기술적 사항에 대해 실무차원에서 내용을 파악 중”이며, “주한미군에 사드가 배치된다면 우리 안보와 국방에 도움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그는 “우리 정부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모든 방안을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임.

나. 한·중 관계

- 중국 보유 S-400 미사일, 한반도 한미 공중활동에 큰 위협(1/25, 연합뉴스)
 - 중국이 실전 배치한 사거리 400km 이상의 러시아제 S-400 ‘트라이엄프’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때문에 한반도 유사시 미국 전투기들의 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옴.
 - 미국 랜드연구소의 티모시 히스 연구원은 중국이 배치할 S-400 지대공 미사일 때문에 한반도 등 극동 지역 안보가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반도, 대만, 남중국해 등에서 분쟁이 발생할 때 미국과 우방의 지원 활동에도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24일(현지시간) 내다보았음.
 - 히스 연구원은 안보 외교 전문 온라인 블로그 ‘워온더록스(War on the Rocks)’ 기고문을 통해 중국이 북한 접경 지역과 산둥(山東)반도에 S-400을 배치하면 북한 전역이 작전 권역에 들어간다고 설명함. 또 남북한 무력 충돌 시 중국은 역내 안정을 해치는 것으로 판단해 북한에 대한 압박용이나 미군과 한국군이 북한에 대한 공습 억제 수단으로 이를 활용할 수 있다고 진단하였음.
- 국방부, 3월말 6·25 중국군 유해 36구 추가 송환(1/28, 연합뉴스)
 - 국방부는 지난해 발굴한 6·25 전쟁 참전 중국군 유해 36구를 오는 3월 말 중국 측에 인도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힘.

- 한중 양측은 지난 27일 오후 중국 베이징에서 중국군 유해 송환을 위한 실무 협의를 열어 이같이 합의하였음. 실무협약에는 장학명 국방부 군비통제차장과 리귀광 중국 민정부 보훈국 부국장이 각각 양측 수석대표로 참석함.
 - 이번 합의에 따라 국방부는 작년 3월 중국군 유해 68구를 송환한 이후 발굴한 유해 36구와 관련 유품을 오는 3월 31일경 인천공항에서 중국 측에 인도할 예정임.
- 中, 신중한 처리 희망…韓美 사드배치 문제에 거듭 경고음(1/30, 연합뉴스)
- 중국정부는 29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의 주한미군 배치 문제와 관련, “유관국가(한국)가 관련 문제를 신중(慎重)하게 처리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힘.
 -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반도(한반도)의 국면은 매우 복잡하고 민감하다.”며 이같이 언급하였음. 특히 “이전에도 우리의 입장을 밝혔듯, 사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매우 일관되고 명확한 것”이라며 “우리는 그 어떤 국가든 자신의 안전을 도모할 때에는 다른 국가의 안전이익과 지역의 평화안정도 고려해야 한다고 여긴다.”고 밝혔음.
 - 중국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3일 신년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주한미군의 사드배치 문제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 등을 감안해가면서 우리의 안보와 국익에 따라서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서도 거의 비슷한 반응을 내놓은 바 있음.

다. 한·일 관계

- 日외무상, 위안부 합의 이행 일정, 결정된 것 없다(1/26, 연합뉴스)
-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26일 지난해 12월말 위안부 문제 합의와 관련해 양국 정부간에 이행 기한은 정하지 않았다고 밝힘.
 - 또한, 기시다 외무상은 한국 정부가 만드는 위안부 재단에 대한 10억엔(약 103억원) 출연 문제나 소녀상 철거 문제에 대해서는 “양 정부가 책임을 갖고 실시(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함.
 - 한편,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관방 부(副)장관은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직접 사과를

요구한데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에게 “한일 정부 간 합의에 대해 여러 의견이 한국을 중심으로 있는 것으로 안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한 것으로 전해짐.

- **日위안부연구 선구자, 가해자가 소녀상 철거요구 있을 수 없어(1/26, 연합뉴스)**
 - 일본군 위안부 연구의 선구자로 꼽히는 요시미 요시아키(吉見義明) 일본 주오(中央)대 교수는 작년 말 한일 군위안부 합의에 대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것”이라며 “다시 (협상)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 요시미 교수는 26일 군위안부 피해자인 이옥선(90), 강일출(89) 할머니가 참석한 가운데 일본 시민단체 주관으로 도쿄 중의원 제1의원회관에서 열린 증언 집회에서 이같이 말함. 그는 “일본 정부가 10억 엔(102억 원)을 출연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지원금이 배상금이 아니라고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상이 확실히 말했다.”며 “이는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이어 “고노담화(1993년에 나온 군위안부 관련 담화)에는 역사교육과 역사연구에 대한 언급이 있지만 이번엔 역사교육 등 재발방지 조치가 일체 없다.”며 “분명히 고노담화보다 후퇴한 것”이라고 언급함. 또 “재발방지를 위한 기념상이라할 소녀상을 가해자(일본) 측이 철거하라고 하고 한국 정부가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고 소개한 뒤 “당사자 의향이 완전히 무시됐다.”고 말하였음.
- **후쿠다, 한일, 이혼하고싶어도 못하는 부부…위안부타결 좋았다(1/27, 연합뉴스)**
 -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전 일본 총리는 작년 말 한일 군위안부 합의에 대해 “결말을 본 것은 매우 좋았다.”고 말하였음. 또한, “적절한 비유는 아니지만 한·일은 이혼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부부와 같다.”며 “계속 함께 있기 때문에 늘 사이가 좋은 것이 좋다.”고 언급함.
 - 후쿠다는 또 한일 합의의 배경에 대해 “산케이 신문 전 서울 지국장에게 (한국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리고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을 둘러싼 헌법 판단을 피함으로써 한국 측은 관계개선을 향해 공을 던졌다.”며 “그것을 받아들이는 감수성이 일본 측에 있었다.”고 분석함.
 - 그러면서 “일·중·한 관계가 잘 되지 않으면 세계 속에서 일본 외교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강조했다고 전해짐.

- **日의원 소녀상 이전결의문 제출…아베, 한일모두 합의이행해야(1/29, 연합뉴스)**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29일 위안부 소녀상 조기철거를 요구하는 자민당 의원들에게 “한일 간 (지난 연말) 위안부 합의를 일본 측도 성실히 실행(이행)할 것이며, 한국 측도 마찬가지로 성의를 갖고 해주길 바란다.”고 말하였음.
 - 그는 이날 관저에서 위안부 소녀상 조기 철거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전달하러 온 자민당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동석했던 나카소네 히로후미(中曾根弘文) 전 외무상이 기자들에게 전했다.
 - 이날 아베 총리는 소녀상 이전 문제를 특정해서는 구체적인 발언을 하지는 않았으나 나카소네 전 외무상은 “철거해 주길 바란다고 결의문에 써 있다.”며 “총리도 물론 그런 생각이다.”라고 주장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함.

- **한일, 조선통신사 기록 세계유산 공동신청 공식합의(1/29, 연합뉴스)**
 - 한국과 일본 민간단체가 조선 통신사 기록을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공동 신청하는 방안에 공식 합의했음.
 - 부산문화재단과 일본 조선통신사 연지연락협의회는 29일 일본 나가사키(長崎)현 쓰시마(對馬) 시에서 공동 신청서에 서명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함. 양측 대표로는 이문섭 부산문화재단 대표이사, 마즈바라 가즈유키(松原一征) 조선통신사연지연락협의회 이사장이 각각 서명하였음.
 - 등재 신청할 자료는 외교문서와 문화기록 등 111건 333점이며, 한국 측에서 63건 124점, 일본 측에서 48건 209점을 각각 선정하였음. 양측은 3월까지 신청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내년 등록을 목표로 하고 있음.

- **日정부, 위안부 강제연행 증거없다 입장 유엔에 제출(1/31, 연합뉴스)**
 - 일본 정부가 군위안부 강제연행의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공식 입장을 작년 말 한일 합의 이후 유엔 기구에 제출한 것으로 31일 확인되었음. 이는 군위안부 합의 이후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을 강조해온 일본 정부가 국제사회에서 위안부 문제의 강제성을 부정하는 행보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옴.
 -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홈페이지에 의하면, 일본 정부는 내달 15일부터 3월 4일까지 제네바 유엔 본부에서 열리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이하 위원회) 제63차 회의를 앞두고 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에 군위안부 강제연행의 증거가 없다는 주장을 실었음.

- 일본 정부는 “일본 정부의 관련 부처와 기관이 가진 유관 문서의 연구와 조사,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에서의 서류 검색, 전직 군부 측과 위안소 관리자를 포함한 관계자에 대한 청취 조사,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에 의해 수집된 증언 분석 등 전면적인 진상 조사를 실시했다.”면서 “이런 조사에서 일본 정부가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어디에도 군과 관헌에 의한 위안부 ‘강제 연행(forceful taking away)’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음.
- 日, 아베의 ‘증거없다’ 논리로 군위안부 강제연행 ‘진실가리기’(1/31, 연합뉴스)
 - 일본 정부가 최근 유엔 기구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군위안부 강제연행의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주도의 ‘진실 가리기’로 규정할 수 있음.
 - 아베 총리는 지난 18일 국회에서 질의에 답하면서 “이제까지 정부가 발견한 자료 중에서 군과 관헌에 의한 이른바 ‘강제연행’을 직접 보여주는 기술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을 (아베 본인의 1차 집권기인) 2007년 각의(국무회의) 결정했다.”며 “그 입장에는 어떠한 변화도 없다.”고 말했다.
 - 일본 정부가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답변한 내용은 아베 총리의 이 발언을 거의 그대로 옮긴 셈임. 아베는 자신의 첫 집권기에 정부 공식 입장으로 정한 것을 2012년 12월 재집권 후 누차 언급한데 이어 작년 말 한일 간 군위안부 합의 도출 후 국내외적으로 아예 ‘대못박기’를 시도하는 양상임.
 - 아베 총리의 발언은 엄밀히 말해 ‘군위안부 강제연행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일본 군인과 정부 당국자가 강제연행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임. 하지만 보통 사람이 꼼꼼이 따져보지 않고 들으면 ‘강제연행이 없었다.’는 것으로 간주되기 십상이라는 점에서 문제는 심각하다고 할 수 있음.

라. 한·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마. 미·중 관계

- 시진핑 3월 방미...핵안보정상회의 참석할 듯(1/25, 연합뉴스)
 -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3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핵안보 정상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5일 보도함. 이 회의에서 미중 정상은 북한의 핵실험 이후 제재 방안과 역할 등을 논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통들은 내다보았음.
 - 최근 홍콩에서 열린 중화에너지 기금위원회 콘퍼런스에 참석한 미국과 중국의 국가안보 및 군사 전문가들에 따르면 시 주석은 3월 31일~4월 1일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 북한 핵문제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짐.
 - 중국 정부는 아직 시 주석의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을 확정하지는 않고 있으나 콘퍼런스에 참석한 중국 학자들과 전문가들은 시 주석의 방미 가능성이 크다고 전함.

- 토머스 새년, 중국의 대북제재 관여 방법 모색할 것(1/27, 연합뉴스)
 - 토머스 새년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 내정자는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의 추가 제재와 관련해 “중국이 적극적으로 관여할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언급함.
 - 일본을 방문 중인 그는 지난 26일 주일 미국대사관에서 가진 현지 언론과의 회견에서 “북한의 국제적 고립을 부각시키겠다.”며 “한·미·일, 호주, 인도 등 동맹국과 함께 중국과도 대화를 심도 있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교도통신 등이 27일 전함.
 - 또한, 그는 중국을 방문한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미국이 지향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추가제재결의안에 대해 “미국 정부의 명확한 메시지를 중국 측에 전달할 것”이라고 밝힘.

- 中, 대북제재에 ‘완강’...전문가들, 케리 방중 성과 없을 듯(1/27, 연합뉴스)
 - 북한에 대한 추가 고강도 제재를 끌어내기 위해 중국을 방문한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중국의 완강한 견제 때문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중화권 전문가들의 분석이 이어지고 있음.
 - 중국 관영 차이나데일리는 27일 스인홍(時殷弘) 중국 인민대 국제관계학원 교수의 분석을 인용해 북한의 최근 핵실험에 대한 중국의 분노에도 전략적

판단과 복잡한 정세로 인해 미국과 한국이 기대하는 고강도 제재는 이뤄지지 않을 것 같다고 전함. 스 교수는 “케리 장관의 방중으로 미중 양국이 대북제재 문제를 면밀하게 논의하겠지만 실질적인 진전을 이룰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 대북 제재문제에 관한 미중 양국의 입장은 서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으며, 이와 관련,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6일 중국의 대북 접근법을 ‘실패’로 규정하고 추가 압박을 촉구한 케리 장관을 상대로 “함부로 이러쿵저러쿵하지 말라”며 “도리에 매우 어긋난 것이며 건설적이지도 않다.”고 반발하기도 했음.

■ 美中 남중국해 문제도 평행선… 대만엔 ‘하나의 중국’ 재확인(1/28, 연합뉴스)

- 28일 중국 언론과 외신에 따르면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과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의 27일 베이징 회담에서 양측은 남중국해 갈등과 관련해 서로의 입장을 확인한 채 구체적인 해법을 찾지 못한 것으로 관측됨.
- 이번 외교장관 회담에서 케리 장관은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영유권 주장 강화와 인공섬 활주로 건설 행위가 주변국들의 경계심을 높이고 있다며 이를 중단할 것을 촉구함.
- 왕 부장은 이에 대해 “중국은 영토 주권과 합법적 해양권익을 수호할 권리가 있다.”며 중국이 이 해역을 군사화하려 하고 있다는 미국 등의 주장을 반박하며, 특히 “미국이 객관성, 공정성, 이성을 갖고 남중국해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며 미국이 남중국해 문제를 계기로 동남아국가들과 ‘반중(反中) 블록’을 형성하려는데 대해 경계감을 보이기도 했음.

■ 美·中, 베이징서 노골적 ‘네 탓 공방’…북핵갈등 점입가경(1/28, 연합뉴스)

- 대북제재 수위에 대한 현격한 의견차가 표출된 미·중 고위급 당국자의 ‘베이징 회동’에서는 북핵 문제에 대한 상대의 ‘무책임’을 탓하는 ‘네 탓 공방전’도 노골적으로 연출되었다고 전해짐.
-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 함께 지난 27일 베이징 외교부 청사 18층 회의실에서 연 공동기자회견에서 중국은 북핵 문제에 대한 책임을 다해왔으며 “(북핵 해결을 위한 중국의 노력을) 터무니없이(無端) 추측하고 곡해”하지 말라고 주장함. ‘터무니없는 추측’은 케리 장관이 최근 제기한 ‘중국의 대북접근법 실패론’을 정면으로 겨냥한 것으로 해석됨.

- 한편, 케리 장관은 북한이 ‘수소탄 실험’을 한 직후인 지난 8일 왕이 장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중국의 기존 대북 접근법은 사실상 실패했다고 규정하면서 중국을 압박한 것으로 알려짐.
- 美사령관, 남중국해, 중국소유 아냐…中, 허튼소리 설전(1/29, 연합뉴스)
 - 해리 해리스 미국 태평양사령관이 최근 토론회에서 남중국해는 중국 소유가 아니라고 주장한 데 대해 중국 국방부 대변인이 ‘허튼 소리’라며 원색적으로 비난함.
 - 해리스 사령관은 지난 27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주최 토론회에서 개인 견해를 전제로 “남중국해 도서는 중국 소유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미국은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주장에 지속적으로 맞설 것”이라고 밝혔음.
 - 이에 대해, 양위쥘(楊宇軍)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매우 경악스럽다.”며 “역사적인 상식이 결핍된 것”이라고 비난함. 양 대변인은 “중국은 남중국해 도서와 부근 해역에 대한 주권을 갖고 있다.”며 “이는 역사적·법리적으로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주장함.
- 중국, 2020년 남중국해 지배권 완전 장악할 것(1/29, 연합뉴스)
 - 해리 해리스 미국 태평양사령관은 27일(현지시간) 중국이 남중국해 분쟁 지역에 대한 군사화를 계속한다면 오는 2020년이 되면 남중국해 전역에 대한 지배권을 장악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음.
 - 해리스 사령관은 이날 워싱턴D.C.에서 열린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주최 ‘인도-아시아-태평양의 전략적 기회’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 중문판이 29일 보도함.
 - 그는 중국이 지난 2년간 남중국해 분쟁도서인 스프래틀리 군도(중국어 명 난사 <南沙>군도)의 섬과 암초들에 인공섬을 조성해 군사화 행동을 했다면서 피어리 크로스(중국어 명 용수자오 <永暑礁>)를 대표적인 사례로 들으며, 중국이 목표대로 2020년까지 일련의 인공섬 조성 및 군사화 조치를 완료하면 남중국해 전역에 대한 지배권을 장악할 것으로 내다보았음.

- 시진핑, 한반도핵 거론하며 “미중 간 상호존중” 강조(1/29, 연합뉴스)
 -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존 케리 미국 국무부 장관과의 만남에서 ‘한반도 핵문제’ 등을 거론하며 서로 충돌하지 말고, 서로 존중해나가자고 강조함.
 - 28일 중국 외교부와 미국 국무부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시 주석은 전날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케리 장관과 만나 양국이 그동안 ‘신형대국관계’를 통해 무역, 군사 등 양자관계와 지역·글로벌 문제에서 효과적으로 협력해왔다고 언급함.
 - 이어 시진핑 주석은 “나는 중미가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세계를 이롭게 하는 대사(大事)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해왔다.”며 “쌍방은 양국 지도자가 달성한 컨센서스(신형대국 관계)를 실행하며 불(不)충돌·불대항, 상호존중, 협력공영(원원)의 원칙을 견지 해야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짐.

바. 미·일 관계

- 미일 외무장관 통화…北미사일에 긴밀히 연대해 대응(1/29, 연합뉴스)
 -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29일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 통화를 하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준비 움직임과 관련해 양국이 긴밀히 연대해 대응하기로 했음.
 - 두 사람은 또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추가 제재 결의안에 강력한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함.
 - 미일 외무장관은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인공섬을 만들며 영유권 주장을 강화 하는데 대해 “해양에서 법의 지배 확립을 위해 미일이 계속 협력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모았음. 이번 통화는 일본 측의 요청으로 30분가량 진행되었다고 전해짐.
- 美관리, ‘센카쿠 국유화’ 당시 日에 중국과 사전협의 요청(1/31, 연합뉴스)
 - 2012년 9월 일본 정부의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 국유화 선포에 앞서 미국 정부 고위 관리가 일본 측에 중국 정부와 사전 협의를 요청한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최근 공개된 힐러리 클린턴 전 미국 국무장관의 이메일에서 드러났다고 요미우리신문이 31일 전함. 신문에 따르면 일본의 외무성 간부는 중국이 최종적으로는 일본의 국유화를 받아들일 것이라는 전망을 미국 측에 제시했다는 것도 이메일에 기록돼 있음. 아울러 중국과 일본의 인식차가 관계 악화로 이어질 것을 미국 측이 우려했다는 내용도 나와 있음.
- 이런 내용은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장관 재직 시 사적 메일 주소를 공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뒤 미국 국무부가 지난 29일(현지시간) 공개한 약 1천통의 이메일 가운데 한통에 기재돼 있음.

사. 미·러 관계

- 러시아 전투기, 美정찰기에 '5m 거리' 초근접 비행(1/30, 연합뉴스)
 - 러시아 전투기가 흑해상에서 비행 중이던 미국 공군 정찰기에 불과 5m 거리까지 접근하는 위험천만한 초근접 비행을 했던 것으로 나타남.
 - 29일(현지시간) CNN 방송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지난 25일 러시아 전투기 Su-27이 흑해 영공을 비행하고 있던 정찰기 RC-135U에 '위험하고 전문가 답지 못한' 방식으로 접근했다고 밝힘.
 - 미 국방부는 Su-27이 러시아 해안에서 약 64km 떨어진 지점에서 비행 중이던 RC-135U에 약 5m 가까이 다가와 비행을 했으며 이번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하였으며, 당시 러시아 전투기가 무장 상태였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음.

아. 중·일 관계

- 中·日 경제협약체 구성...실리 위해 손잡았다(1/26, 연합뉴스)
 - 중국과 일본의 정부와 중앙은행이 처음으로 경제·금융 문제를 논의할 경제 협의회를 연내 구성키로 함에 따라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음.
 - 중국과 일본이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열도에서의 충돌과 과거사 역사인식 문제에서의 꺾끄러움에도 돌연 경제·금융 부문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배경에는 양국의 실리가 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음.
 - 중국판 세계은행인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서 소외된 일본은 중국과

경제협력을 확대해 중국의 역내 경제패권 확대를 견제할 수 있고, 중국은 경제성장둔화와 금융시장 불안 속에 일본의 자본을 확보할 수 있음. 특히, 중국과 일본은 각각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필요할 경우 서로 지원하고 도움을 받는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는 계산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임.

- **日언론, 중국 해경선박 4척 센카쿠열도 일시 침입(1/27, 연합뉴스)**
 - 27일 오전 10시경 일본 오키나와(沖縄)현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 <釣魚島>)열도 주변에 중국 해경국 소속 선박 4척이 침입했다고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이 보도함.
 - 교도통신은 “이들 선박은 일본 영해에 잇따라 침범한 뒤 1시간 45분가량 지나서 영해 밖으로 나갔다.”고 전하였음. 통신에 따르면 중국 측 선박은 기관포로 보이는 것을 장착한 해경 31239호 이외에도 해경 2151호, 해경 2337호, 해경 2506호 등임.
 - 일본 해경 순시선은 이들 선박에 “영해 밖으로 나가라”고 경고했고, 이들 선박에서는 “댜오위다오는 예부터 중국 고유의 영토다.”라는 응답이 있었다고 교도통신은 전함.

- **구로다 日銀 총재, 中 인민은행과 통화 스와프 논의 중(1/29, 연합뉴스)**
 - 일본 중앙은행이 마이너스 금리를 깜짝 도입한 데 이어 중국과 통화 스와프를 논의하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밝힘.
 - 구로다 하루히코(黒田東彦) 일본은행 총재는 29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 인민은행과 통화 스와프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며 논의 진행 정도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함. 통화 스와프는 체결 당사국 중 일방의 외화 수급이 어려울 때 자국 통화를 상대방 중앙은행에 예치하고 그만큼의 외화를 빌려오는 제도임.
 - 최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과 중국은 중앙은행이 참가하는 경제·금융 협의체를 연내 출범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짐.

자. 중·러 관계

- 中, 러시아제 최첨단 전투기 Su-35 연내 도입…美 긴장(1/25, 연합뉴스)
 - 중국이 연내에 러시아제 최첨단 전투기 수호이(Su)-35를 도입할 계획이어서 미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고 중국 매체들이 미국 언론을 인용해 25일 보도함.
 - 환구망(環球網) 등 중국 언론은 25일 미국 외교안보 전문지 ‘내셔널 인터레스트’의 최근 보도를 인용, “중국이 지난해 러시아와 체결한 Su-35 24대 구매 계약에 따라 올해 4분기에 1차 인도분을 들여올 것”이라고 보도함.
 - 이와 관련, 러시아의 군사외교 소식통은 “전투기 공급은 올해 4분기에 시작될 것”이라면서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 중”이라고 언급함. 러시아는 지난해 11월 Su-35 24대를 중국에 수출하는 약 20억 달러(약 2조 3천270억원) 규모의 계약을 중국과 체결한 바 있음.

차. 일·러 관계

- 2차대전 후 러영토 vs 수용 불가…러-일 북방영토 대립(1/27, 연합뉴스)
 - 러시아와 일본이 27일 북방영토(쿠릴 4개섬)의 영유권을 둘러싸고 대치함.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지난 26일(현지시간) 북방영토가 2차대전 이후 러시아 영토가 됐다며 일본 측의 반환 요구를 일축하자 일본 정부는 이날 “수용할 수 없는 발언”이라며 반박하였음.
 -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모스크바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일본과의 평화조약 체결이 영토문제 해결과 같은 의미가 아니다.”라고 밝혔다고 교도통신 등이 보도함. 이런 발언은 북방영토 문제 해결이 평화조약의 전제조건이라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부정하는 발언임.
 - 라브로프 장관은 평화조약에 대해 “2차대전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것을 전제하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해 2차대전에서 일본이 패한 뒤 북방영토가 구소련 영토가 된 점을 일본 정부가 인정해야 한다고 압박한 것으로 전해짐.

© 국제전략연구실 제공

Ⅲ. 북한 인권 동향

1. 북한 내부실상 및 대내외 동향

- 北, 북한인권법에 “극악한 대결 책동” 비난(1/28, 연합뉴스)
 - 여야가 최근 처리하기로 합의한 북한인권법에 대해 북한은 28일 “극악한 대결 책동”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음.
 - 북한인권법 처리에 대한 여야 간 합의 이후 북한의 첫 반응임.
 - 북한의 대외선전용 주간지인 통일신보는 이날 ‘정치 협잡꾼들의 가소로운 망동’이라는 기사에서 “오랫동안 국회에 처박혀 있던 케케묵은 북인권법을 꺼내 들고 공화국에 대한 압박수단으로 써먹으려는 극악한 대결 책동이며 목숨 연명의 가련한 추태”라고 비난했음.
 - 통일신보는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정치가 펼쳐지고 청년 강국이라는 시대어와 더불어 밝은 미래가 담보되는 공화국에 인권문제란 있을 수 없다”며 “이는 공화국의 막강한 위력과 전도양양한 미래에 질겁한 대결 광신자들의 단말마적인 발악”이라고 주장했음.
 - 그러면서 남한이 오히려 “인권의 불모지”이고 따라서 북한인권을 논하는 것이 “언어도단이고 어불성설”이라며 “생쥐 나라의 고양이 국회라는 오명을 쓰게 만든 정치 협잡꾼들의 가소로운 북인권법 채택 놀음은 그 누구에게도 통할 수 없다”고 역설했음.
- “北 사회 부정부패 재앙적 수준으로 만연”(1/28, 데일리NK)
 - 북한이 올해도 세계 최악의 부패 국가로 선정되면서 5년 연속 ‘세계에서 가장 부패가 심한 나라’로 지목됐음.
 - 독일 베를린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투명성기구(TI)가 1월 27일 세계 168개 나라의 국가청렴도를 조사한 ‘2015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를 통해 이 같이 밝혔음.
 - 부패인식지수는 부패정도를 0부터 100까지 점수로 환산해 점수가 높을수록 청렴도가 우수한 국가로 평가하고 있음.
 - 이 조사에서 북한은 올해도 8점을 받아 아프리카 소말리아와 함께 세계 최하위에 머물렀음.

- 북한은 지난 2011년 조사 대상에 오른 이후 계속 8점을 받아 5년 연속 세계 최하위라는 꼬리표를 달게 됐음.
 - 보고서는 “부패는 고위 관리들이 권력을 남용해 사적 이익과 특권을 누리 사회 전반에 심각한 타격을 미치는 행위가 핵심”이라면서 “북한 사회는 부정부패가 만연해 있으며 이는 재앙적 수준”이라고 지적했음.
 - 보고서는 특히 “정부의 부패를 감시하는 언론의 자유 정도와 정부의 조세방식, 국민의 알권리, 고위 관리들의 청렴도, 사법적 투명성은 부패 척도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 북한은 이러한 항목에서 점수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음.
 - 이와 관련해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D)는 2014년 최종보고서에서 “북한 사회는 전반적으로 부정부패가 만연한 사회”라고 지적한 바 있음.
- 세계기금, 대북 결핵 퇴치 사업 최상 평가(1/28, 미국의소리)
- ‘에이즈, 결핵, 말라리아 퇴치 세계기금’이 지난해 북한에서 진행된 말라리아 퇴치 사업을 최고 등급인 ‘A1’으로 평가했음.
 - 세계기금 대변인실은 1월 27일 2015년 초부터 9월 말까지 진행된 결핵 퇴치 사업이 내용과 재정지출 면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뒀다며 이같이 평가했음.
 - 이는 전년도 상반기 결핵 퇴치 사업을 ‘A2’ 등급으로 평가했던 것에 비해 한 단계 상향조정한 것임.
 - ‘A1’ 등급은 세계기금의 예산 지원을 받아 진행되는 질병 퇴치 사업을 평가하는 총 5등급(A1, A2, B1, B2, C) 가운데 가장 높은 등급으로, ‘목표와 기대를 뛰어 넘는 성과’를 낸 것을 의미함.
 - 세계기금은 특히 이 기간 중 2만 6천 669명의 신규 도말양성 결핵환자가 치료 프로그램에 등록하고, 이 가운데 90.3%가 성공적으로 치료를 받았다고 밝혔음.
 - 또 결핵약이 100% 보급됐고, 결핵 치료 프로그램에 대한 감시도 제대로 이뤄졌다고 밝혔음.
 - 세계기금은 지난 2010년부터 2015년 12월 말까지 총 5천300만 달러를 투입해 북한에서 결핵 퇴치 사업을 지원했음.
 - 북한 현지에서의 실제 사업 이행은 유엔아동기금 유니세프가 맡고 있으며, 양성반응 환자들을 진단 치료하고 현미경과 시약, 치료약 등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 활동임.

- 세계기금은 또 지난해 북한 전역의 결핵 실태조사를 위해 90만 달러를 지원했으며, 북한이 지난해 10월 세계보건기구 WHO와 유니세프의 기술 지원 아래 처음 시작한 이 조사는 오는 3월 마무리 될 예정이다.

■ 중 인신매매단, 젊은 여성 탈북 유인(1/28, 미국의소리)

-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국경통제가 한층 강화됐지만, 탈북 도강은 여전히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평안북도와 접경한 국경지방에 거주하는 한 대북소식통은 “최근 탈북도 새로운 형태로 진화되고 있는데, 중국에서는 성 매매업에 동원될 수 있는 젊고 예쁜 북한 여성들을 보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고 1월 28일 밝혔다.
- 지금까지는 탈북자들이 먹고 살기 위해 중국으로 탈출하거나 가족 친척의 도움으로 국경을 넘는 경우가 있었지만, 중국 범죄조직이 불법 영업소에 종사할 여성들을 찾고 있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됨.
- 이 소식통은 “중국 남방의 조직폭력배와 결탁한 한 인신매매단은 얼마 전에 북한 측 브로커에게 ‘어리고 예쁜 여자들을 데려오라’ 또는 ‘성매매업에 종사했던 여자도 괜찮다’는 주문을 했다”고 말했다.
- 이렇게 되어 북한 내 브로커들은 함흥과 청진을 비롯한 시내 대기집(불법 숙박소)에서 몰래 성매매를 하는 여성들도 탈북 대열에 포함시킨다는 것임.
- 소식통은 “북한 내 브로커들은 남포나 평성 등 멀리 떨어진 성매매 여성들에게도 손을 뻗는다”면서 “중국에 가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말로 꼬드긴다”고 언급했음.
- 1990년 중반부터 북한에서 시작된 생계형 성매매는 현재 불법장소에서 암암리에 폭 넓게 벌어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이 상황을 잘 아는 중국 내 인신매매조직이 북한 내 성매매 여성들을 끌어들이는, 이른바 ‘원정 성매매’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는 설명임.
-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인신매매 조직은 10~20대 북한 여성의 경우 인민폐 2~3만위안을 지불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팔려간 여성들은 남방인 절강성이나 복건성까지 팔려가게 된다는 것임.
- 이와 관련, 30대의 탈북 여성은 “대부분 북한 여성들이 ‘중국에 시집 보내준다’는 말에 솔깃해 국경을 넘지만, 그렇다고 모두 불법 영업소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일부는 중국인과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사는 여성들도 있다”고 지적했다.

- 미국 국무부가 발표한 ‘2015년 인신매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인신매매 방지 활동과 관련해 지난 2003년부터 13년 연속 최하 등급인 3등급으로 지정됐음.
- 북한 노동교화소 탈출 탈북자, 러시아서 3번째 망명 신청(1/29, 미국의소리)
 - 북한의 노동교화소를 탈출한 탈북자가 러시아에서 3번째 망명을 신청했다고, 영국의 ‘가디언’ 신문이 러시아 현지언론을 인용해 1월 28일 보도했음.
 - 신문은 이 탈북자가 추방되면 죽음에 직면할 것이 거의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앞선 두 차례의 망명 신청이 러시아 당국에 의해 모두 거부됐다고 전했다.
 - 보도에 따르면 이 탈북자는 1997년 처음 북한을 탈출해 중국에서 약 10년 동안 불법 체류했음.
 - 그러다가 중국 당국에 체포돼 북한으로 송환됐고, 북한에서 노동교화소에 수감됐으나 다시 중국으로 탈출하는데 성공했고, 2013년에 러시아에 불법 입국했음.
 - 이 탈북자는 러시아에서 체포된 뒤 단식투쟁 끝에 가까스로 망명을 신청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 그러나 러시아 이민국은 이 탈북자가 북한에서 특별하게 생명의 위협을 받을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두 차례 망명 신청을 모두 기각했음.
 - ‘가디언’ 신문은 이 탈북자의 세 번째 망명 신청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적다며, 이 탈북자를 돕는 인권운동가들은 그가 난민 지위를 받거나 제3국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될 때까지 계속 항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북한 인터넷 사용률 세계 최하위…휴대전화 이용은 늘어(1/29, 미국의소리)
 - 북한의 인터넷 이용률이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음.
 - 국제 마케팅업체인 ‘위아소셜’이 1월 27일 발표한 ‘2016 디지털 접속 (Digital in 2016)’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인터넷 이용자는 약 7천 명으로 전체 인구의 0.03%에 불과했음.
 - 이는 조사대상 214개 나라 중 214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 세계 평균 인터넷 접속 인구비율인 46%에도 한참 못 미치는 수치임.
 - 특히 북한 다음으로 인터넷 이용자 비율이 낮은 아프리카 니제르의 2%와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음.

- 인터넷 이용자 비율이 낮은 만큼 페이스북과 같은 인터넷 사회연결망에 접속하는 비율에서도 전 세계 최하위를 기록했다.
- 위아소셜은 북한의 컴퓨터를 통해 인터넷 사회연결망에 접속하는 인구를 6천800명,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기기 즉, 휴대전화를 통한 인터넷 사회연결망 사용자를 4천 명으로 추산했음.
-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 북한의 휴대전화 이용자 숫자는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조사에 따르면 북한의 휴대전화 가입자 숫자는 전체 인구의 13%에 해당하는 약 331만 명으로, 지난 2014년 1월 같은 조사에서 드러난 170만 명보다 2배 가까이 늘었음.
- 특히 지난해의 280만 명보다도 약 18%가 늘어나 북한의 휴대폰 가입자는 매년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음.
- 북한은 지난 2008년 이집트의 오라스콤 텔레콤이 체신성과 합작해 설립한 '고려링크'를 통해 평양 등 주요 도시에서 휴대전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2. 북한인권

- 정부 “북한 인권증진-남북관계발전 연계는 부적절”(1/25, 연합뉴스)
 - 정부는 25일 국회에서 제정을 추진 중인 북한인권법과 관련해 “북한인권 증진 노력”과 ‘남북관계의 발전 및 한반도 평화정착’을 연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내놓았음.
 -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북한인권법의 기본원칙과 국가의 책무와 관련해 한쪽(여당)에선 ‘북한인권 증진 노력과 함께 남북관계 발전 및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방향으로도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다른 한쪽(야당)에선 ‘북한인권 증진 노력을 남북관계 발전 및 한반도 평화정착 노력과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이같이 밝혔음.
 - 이 당국자는 “정부는 북한인권 증진 노력과 남북관계의 발전 및 한반도 평화정착을 병렬하는 것(야당 주장)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며 “그렇게 되면 한반도 평화정착이 안 되면 북한인권 개선 노력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인데 한쪽(남북관계의 발전 및 한반도 평화정착)이 잘 안 되더라도 다른 쪽(북한인권 증진 노력)은 해야 한다”고 말했음.

- 여야 원내지도부는 지난 1월 23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북한인권법 제정안을 오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했으나, 이 법의 기본원칙과 국가의 책무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여야 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 실태조사와 정책개발을 위한 기구인 북한인권재단과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 통일부 산하에 여야 동수로 5명씩 추천하는 북한인권자문위원회 설치 등이 주요내용임.
- HRW “북 인권, 반드시 책임 추궁”(1/27, 자유아시아방송)
-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휴먼라이츠워치는 1월 27일 북한 김정은 독재 정권의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추궁 촉구 등을 포함한 650여 쪽의 ‘세계인권보고서 (World Report 2016)’를 발간했음.
 - 휴먼라이츠워치의 필 로버트슨(Phil Robertson) 아시아담당 부국장은 이동의 자유 박탈 등 북한 주민의 심각한 인권유린에 대한 책임자 처벌은 반드시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 로버트슨 부국장은 보고서 조사 대상 기간이었던 2015년에도 북한 당국은 중국과의 국경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당국 허락을 받지 않고 북한을 떠났다는 이유로 심각한 처벌을 가하는 등 주민에 대한 억압을 강화했다고 지적했다.
 - 또한 북한 내부에서도 주민의 이동에 대한 자유를 더욱 더 제한했다고 그는 덧붙였다.
 - 북한전문매체 ‘NK뉴스’는 1월 27일 중국 당국이 북한과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최근 5개월 이내에 쇄기둥과 철조망을 새로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음.
 - 또한 북한 당국도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2011년 이래 계속해서 국경 경비를 순환 근무 시키고 감시 카메라 설치를 늘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 이 같은 국경 통제 강화로 인해 2015년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 수가 2002년 이래 가장 적은 1천 277명을 기록했다고 덧붙였다.
 - 로버트슨 부국장은 북중 국경지대 통제 강화는 주민의 이동을 막으려는 이유 이외에 북한에 외부세계의 정보 유입을 차단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강조했다.
 - 휴먼라이츠워치는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가 2014년 2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지적한 것처럼 현대 사회에서 찾아볼 수 없는 ‘조직적이며 광범위하고 심각한’ 북한의 인권유린 책임자 처벌에 주력할 것이라는 설명임.

- 로버트슨 부국장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해 북한의 인권문제를 2년 연속 의제로 다뤘다고 강조하고 국제사회가 억압받는 북한 주민의 인권을 위해 나서줄 것을 촉구했음.
- 정부 “북한인권법 빨리 통과됐으면 좋겠다”(1/29, 연합뉴스)
 - 정부는 1월 29일 북한인권법의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인권법 통과가 빨리 됐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음.
 -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인권은 인류 보편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노력은 당연한 국가적 책무”라며 이같이 말했음.
 - 그는 “북한도 이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만 하는 그런 사항이라 생각한다”면서 “북한이 (인권법 처리를) ‘극악한 대결 책동’이라고 비난한 것은 아직도 그들이 인민들의 인권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음.
 - 그는 “그렇기에 (북한이) 북한인권에 대해 조금 적극적이고 개선적인 행동을 취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국제사회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인권법 활동에 이렇게 반발하는 것은 인류 보편의 가치를 위반하는 옳지 못한 행동이라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 정 대변인은 최근 북한의 평안북도 동창리 서해 발사장에서 장거리로켓 발사 준비로 의심되는 움직임이 발견된 데 대해선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고,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행위”라고 말했음.
 - 그는 “(북한은) 도발행위에 나서기 전에 민생의 질을 높이는 그런 쪽으로 더 많이 나가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애써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음.
- 인권위, 北인권특별위원회 활동기한 1년 연장키로(1/31, 연합뉴스)
 - 최근 국회에서 북한인권법 처리가 무산된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2011년부터 운영해 온 북한인권특별위원회의 활동 기한을 1년 연장하기로 했음.
 - 1월 31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이달 25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이날로 활동이 종료되는 북한인권특위의 운영을 1년 더 연장하기로 참석자 만장일치로 의결했음.

- 인권위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북한인권법안이 통과되면 북한인권특위를 통해 인권위가 수행할 북한인권 업무의 방향과 역할을 재정립하기로 했음.
- 북한인권법이 끝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때에는 인권위 차원에서 북한인권법안을 만들어 입법을 새로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음.
-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북한인권법을 처리하려 했지만 막판 합의가 깨지면서 무산됐음.
- 인권위는 북한인권법안에 대해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증진이라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며 우려를 표명한 바 있음.
- 북한인권법안은 통일부에 북한인권증진 자문위원회를 두고 통일부 장관이 북한인권 증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통일부가 북한인권 업무를 주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인권위는 이 같은 입법 방향에 대해 통일부 본연의 기능 및 역할과 조화되기 어려워 북한인권 정책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는 입장임.
- 인권위 관계자는 “북한을 대화와 협상의 파트너로 대해야 하는 정부 기관이 북한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인권 문제를 직접 다룬다면 남북 관계에 부담으로 작용할 여지가 크다”며 “인권전담 기구이자 독립기구인 인권위가 북한인권 문제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음.
- 인권위는 북한인권특위를 통해 가변적이고 유동적인 북한인권 이슈에 신속히 대응하는 한편 북한인권 국제심포지엄, 북한이탈주민 인권의식 실태조사, 북한이탈주민 면접조사 등 북한인권과 관련된 업무를 이어나가기로 했음.

3. 탈북자

- “30대 탈북자, 러시아 망명 거절당해 본국송환·처형 위기”(1/29, 연합뉴스)
 - 러시아에서 30대 남성 탈북자가 여러 차례 망명 신청을 거절당해 본국으로 송환돼 처형될 위기에 놓였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러시아 인권운동가의 말을 인용해 1월 28일 보도했음.
 - 보도에 따르면 36세인 익명의 이 탈북자는 2013년부터 러시아에서 영구적 망명을 두 차례 신청하고 단기 망명도 한차례 신청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음.
 - 이 남성은 현재 러시아 당국에 세 번째 영구적 망명 신청을 낸 상태이지만 심사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신문은 전했다.

- 이번에도 탈락할 경우 지난해 11월 북한과 러시아가 맺은 밀입국자 추방 협약에 따라 북한으로 보내져 처형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인권운동 단체 ‘시민지원’을 이끄는 스베틀라나 가누슈키나는 우려했음.
- 그가 러시아 당국에 의해 강제추방되지 않더라도 러시아에서 활동하는 북한 정보요원들에게 납치당하거나 살해당할 위험도 있다고 가누슈키나는 전했다.
- 이 탈북자는 북한에 대기근이 한창이던 1997년 중국으로 탈출해 10년간 도망다니다 강제추방 됐음.
- 북한에서 노동교화소에 보내졌던 그는 다시 탈북에 성공, 중국을 거쳐 2013년 러시아로 건너왔으며 러시아 당국에 체포된 뒤 단식투쟁을 한 끝에 망명 신청을 허락받았음.
- 가누슈키나는 이 탈북자의 망명 신청이 또다시 거부당하더라도 최소한 그가 제3국으로 갈 수 있는 자격이라도 얻을 때까지 당국에 계속 신청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러시아에서는 2004년부터 2014년까지 탈북자 211명이 당국에 망명을 신청했으나 겨우 2명만이 영구적 망명을 허락받았고, 1년짜리 단기 망명이 받아들여진 경우도 90명에 그쳤다고 가디언은 덧붙였다.

4. 이산가족

- “이산가족 문제 해결이 우선”(1/26, 자유아시아방송)
 - 이산가족들은 해마다 그 수가 급격히 줄고 있으며 남은 사람들도 대부분 75세 이상의 고령이라 남은 장래를 예측하기가 어려움.
 - 이 때문에 남한의 통일부는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음.
 - 뿐만 아니라 통일부는 오는 3월부터 6월까지 이산가족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일 계획임.
 - 통일부는 우선 생존 이산가족 6만5천여 명을 대상으로 1차 전화조사와 2차 방문조사를 한다고 밝혔음.
 - 통일부는 또 이번 실태조사 과정에서 유전자 검사나 영상편지 제작에 참여를 희망하는 이산가족들의 신청도 받기로 했음.

- 앞으로 남북 가족 간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법적 분쟁에 대비하는 목적도 있다고 통일부 측은 설명했다.
 - 그러나 정작 이산가족들은 통일부에서 이산가족 문제를 우선시한 것에 대해 반가워하면서도 상봉 정례화와 서신교환 등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 방안이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 통일부 자료에 따르면 북쪽 가족과 교류방법으로 생사확인을 선호한다는 응답자가 10명 중 4명으로 가장 많으며, 현재 생사를 아는 이산가족은 5% 정도에 불과함.
 - 민속명절인 설날을 앞두고 이산가족들은 남북 적십자회담 등이 열려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 방안이 논의되길 희망했음.
- 한미연합회, 이산가족 문제 토론회(1/29, 자유아시아방송)
- 34회 한미연합회 전국대회가 오는 30일 미국 캘리포니아의 명문 대학인 남가주대학(USC)에서 펼쳐짐.
 - 2016년 현안을 놓고 함께 논의하게 되는데 올해 모임에는 함께 생각해야 할 문제로 한반도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토론이 펼쳐질 예정임.
 - 한인 1.5세와 2세대들이 주축인 젊은 단체이지만 이산가족 문제는 나이를 넘어 한인들이라면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한미연합회의 입장임.
 - 지난 1월 28일 한미연합회의 스티브강 사무차장은 이번 대회에 미주 이산가족모임이 만든 다큐멘터리 즉 기록영화도 상영하고, 미주 이산가족들도 이산가족 상봉을 할 수 있도록 법안 통과를 위한 홍보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이날 이산가족 문제를 놓고 다큐멘터리 상영 후 질의응답시간도 마련되며 미국에서 바라보는 이산가족에 대한 시각과 미국의 이산가족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하고 의견을 나눌 예정임.
 - 한미연합회는 미국에 사는 이산가족도 북한의 가족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능한 많은 연방하원의원들을 찾아가고, 서명도 많이 받아 이런 법안이 미국 의회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할 계획임.

5. 납북자

- 특이동향 없음.

6. 국군포로

- 특이동향 없음.

7. 대북지원

- 영 NGO, 탈북자 난민심사 법률지원(1/28, 자유아시아방송)
 - 영국 런던에 기반을 둔 유럽북한인권협회는 1월 28일 영국에 사는 탈북자들의 난민 심사와 절차, 그리고 개선 방안 등을 조언하는 법률 전문인의 면담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 유럽북한인권위원회는 이번 면담에 영국 및 유럽 국가들에 정착하려는 관심을 보이는 탈북자들과 영국인들의 관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 이 기구는 이어, 난민 심사 과정이 법률상, 그리고 절차상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전문 지식이 많이 필요하다고 국제 사회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음.
 - 이 기구는 또 유럽에서 최근 들어 탈북자들이 난민으로 인정받는 사례가 급감하고 있다면서 “위기 상황에서 탈출한 북한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폭넓은 인도주의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조언했음.
 - 한편, 영국은 유럽에서 가장 많은 탈북자들이 정착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2000년대 말부터 점점 난민 심사가 엄격해졌음.
 - 또 한국에 먼저 입국해 한국 국적을 취득한 후 유럽에 난민 신청을 하는 경우들 때문에 혼선을 낳고 있고, 결국 유럽에서 탈북자들에 대한 난민 허가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설명함.
- 미 대북제재법안 ‘인도적지원 폭’논란(1/28, 자유아시아방송)
 -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가 1월 28일 대북제재강화법안을 채택한 가운데, 미국의 대북 지원단체들은 인도주의 지원과 관련한 내용을 완화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음.

- 미국의 대표적인 대북인도주의 지원단체들은 후원자들에게 상원의 법안 논의가 시작되기 전날인 1월 27일까지 거주 지역의 의원에게 대북지원 폭을 대폭 축소하지 않도록 호소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음.
- 머시코, 월드비전, 글로벌 리소스, 사마리탄스 퍼스,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 등 미국의 5대 대북인도주의 지원단체들은 미국 하원이 지난 1월 12일 북한 정권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 대북제재 강화법안(H.R.757)을 채택한 시기를 전후로 의회 관계자에 대한 설득 작업 등 공동 대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 하원이 채택한 대북제재 강화법안은 북한의 돈줄 차단을 위한 대북 금융제재 강화가 핵심 내용이지만 북한과 무기를 거래하는 국가에 대해서도 미국 행정부의 대외 원조를 금지토록 하는 등 인도주의 지원과 관련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음.
- 대북지원단체 관계자는 미국 의회에서 논의 중인 대북제재법안이 인도주의 대북지원을 원천적으로 금지하지는 않지만 의약품 등 지원품목이 대폭 제한되고 지원활동에 필요한 장비를 북한에 보내지 못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며 우려했음.
- 반면 미국이 강력한 대북제재 법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뜻을 의회에 전달하는 미국 내 한인단체들의 움직임도 분주함.

8. 북한동향

- 특이동향 없음.

© 북한인권연구센터 제공